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깜깜한 미래

2023. 4. 13 (목) 오전 10:30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 회의실)



주최 |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 |



국회의원 우원식·김한정·오기형·홍성국



《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소개 》

■ 목적

- 윤석열정부 출범 1년간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파탄 상황 평가
- 경제·사회·정치·외교안보를 총망라한 실정 지적 및 대안 제시

■ 개요

- 일시 : 4월 2주차 ~ 5월 2주차, 총 5주간 매주 1회 진행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 회의실)

분야	일정
(1차) 경제	4월 13일(목) 10:30
(2차) 사회	4월 20일(목) 14:00
(3차) 정치	4월 27일(목) 10:30
(4차) 외교안보	5월 3일(수) 14:00
(5차) 특별토론	5월 9일(화) 14:00



《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

분야	일정	주요내용
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4월 13일(목)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우원식 국회의원(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발제1: 주병기 교수(서울대학교)◦ 발제2: 위평량 소장(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토론1: 김한정 국회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토론2: 오기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토론3: 홍성국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4월 20일(목)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김상희 의원(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 위원장)◦ 발제1: 김윤 교수(서울대학교/보건의료)◦ 발제2: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노동)◦ 발제3: 반상진 교수(전북대학교/교육)◦ 토 론: 유관 상임위 국회의원
3차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4월 27일(목)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박범계 의원(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 발제1: 유종성 교수(가천대학교)◦ 발제2: 지병근 교수(조선대학교)◦ 토 론: 유관 상임위 국회의원
4차 (외교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5월 3일(수)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김민석 의원(정책위의장)◦ 발 제: 최종건 교수(연세대학교)◦ 토 론: 유관 상임위 국회의원
5차 (특별토론)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	5월 9일(화)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 행: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발 제: 시민발언자들 (안전, 언론·노조탄압, 주69시간 논란, 고물가 등 관련)◦ 토 론: 유관 분야 국회의원



《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제1차 경제 :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 목적

- 윤석열정부 출범 1년간 경제분야 실정 지적 및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 일 시 : 2023년 4월 13일(목) 오전 10: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 회의실)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정책위원회
- 주 관 : 국회의원 우원식·김한정·오기형·홍성국

■ 진행 순서

시간	순서	패널 및 주요내용
~ 10:30	사전등록	
10:30 ~ 10:40	국민의례	진행 사회 :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축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사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10:40 ~ 10:45	사진촬영 / 장내정리	
10:45 ~ 10:50	[좌 장] 우원식 국회의원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10:50 ~ 11:30	발제 (각 20분)	경제정책 부문 주병기 교수 (서울대학교) 민생경제 부문 위평량 소장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11:30 ~ 12:15	패널토론 (각 15분)	• 김한정 국회의원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오기형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 홍성국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12:15 ~ 12:30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Contents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발 제

1. 경제정책 부문

주병기 교수 (서울대학교) ----- 1

2. 민생경제 부문

위평량 소장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 25

토 론

• 김한정 국회의원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 41

• 오기형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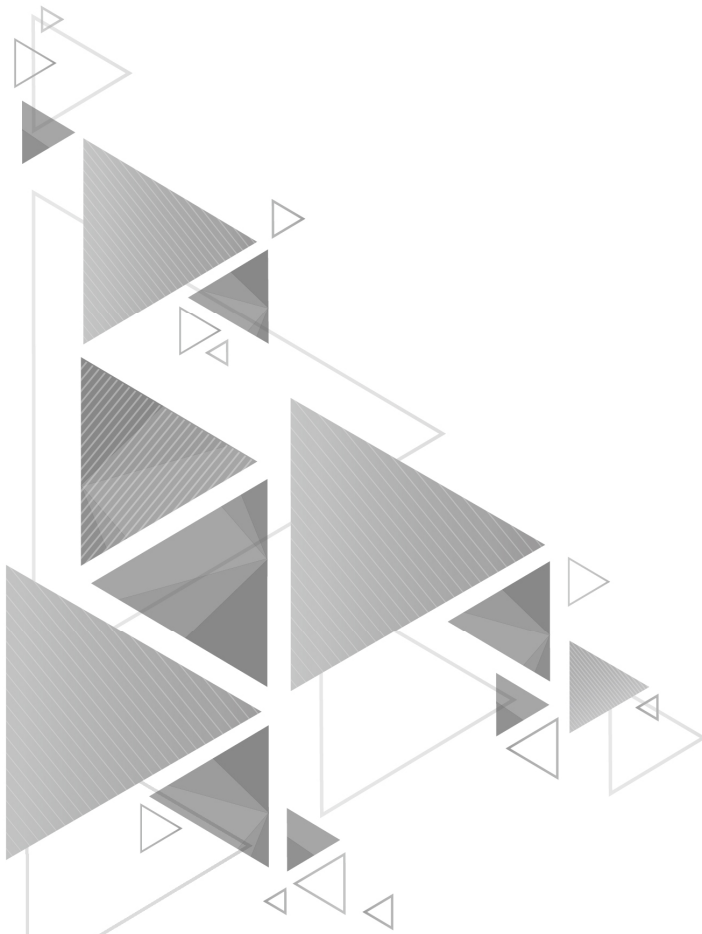
• 홍성국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49



발제 1

경제정책 부문

주병기 교수
(서울대학교)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경제분야

주 병 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

2023년 4월 13일

1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2022년 글로벌 경제와 2023년 전망

-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 중국 코로나 재확산과 급격한 경제위축
성장률 급감 (8.7%→2.7%)
-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과 미-중 간 글로벌 정치경제적 갈등 고조;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
- 팬데믹 위기, 인플레이와 고금리의 금융 불안정, 정치경제적 긴장 고조의 삼중 위기
- 고물가-고금리의 전 세계적 경기침체 국면
- 2023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1.7%
(선진국 0.5%; GEP 2023) (OECD 전망 2.2%)
- 1990년대 이후 코로나팬데믹과 금융위기 다음으로 낮은 성장전망

TABLE 1.1 Real GDP¹

(Percent change from previous year unless indicated otherwise)

	2020	2021	2022e	2023f	2024f
World	-3.2	5.9	2.9	1.7	2.7
Advanced economies	-4.3	5.3	2.5	0.5	1.6
United States	-2.8	5.9	1.9	0.5	1.6
Euro area	-6.1	5.3	3.3	0.0	1.6
 China	2.2	8.1	2.7	4.3	5.0
World trade volume⁵	-8.2	10.6	4.0	1.6	3.4
Commodity prices⁶					
Energy price index	52.7	95.4	151.7	130.5	118.3
Oil price (US\$ per barrel)	42.3	70.4	100.0	88.0	80.0
Non-energy commodity price index	84.4	112.0	123.7	113.7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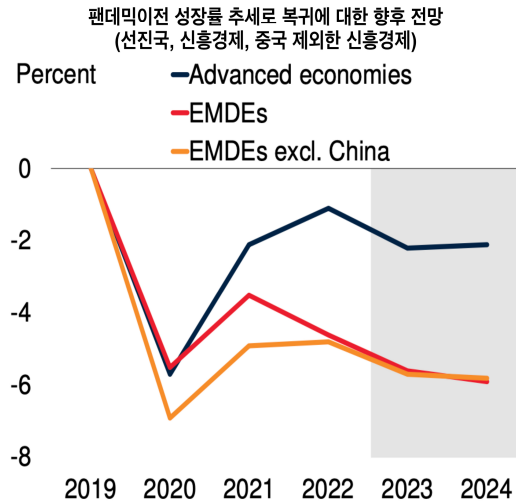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2023

2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2022년 글로벌 경제와 2023년 전망

- 글로벌 무역(trade volume) 성장률 전망 1.6% (2022년 4.0%; WEP 2023) (OECD real trade 성장률 전망 2.9%, 2022년 5.4%)
- 글로벌 성장률 보다 무역성장률의 하락 폭은 더 심각; 중국과 개발도상국 진영의 성장률 하락 폭이 큰 영향
- 팬데믹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팬데믹 이전의 트렌드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 미-중 무역/패권 경쟁이 글로벌 무역질서의 양분화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저성장 추세가 고착될 수 있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자유무역질서의 퇴조
- 한국경제전망: 2023년 성장률 2% 이하 (대외 수요 감소) (OECD 1월 전망), 정부 전망은 1.6% (KIF, 1.7%) -> OECD 3월 하향 조정
물가전망: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지속; 2024년 말 이후 2% 이하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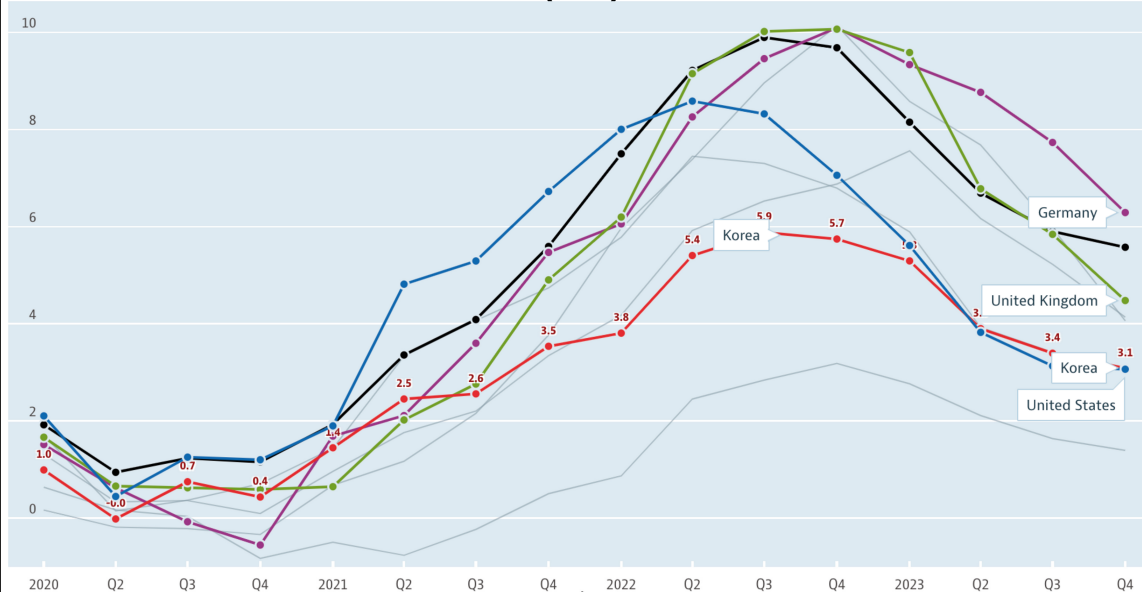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202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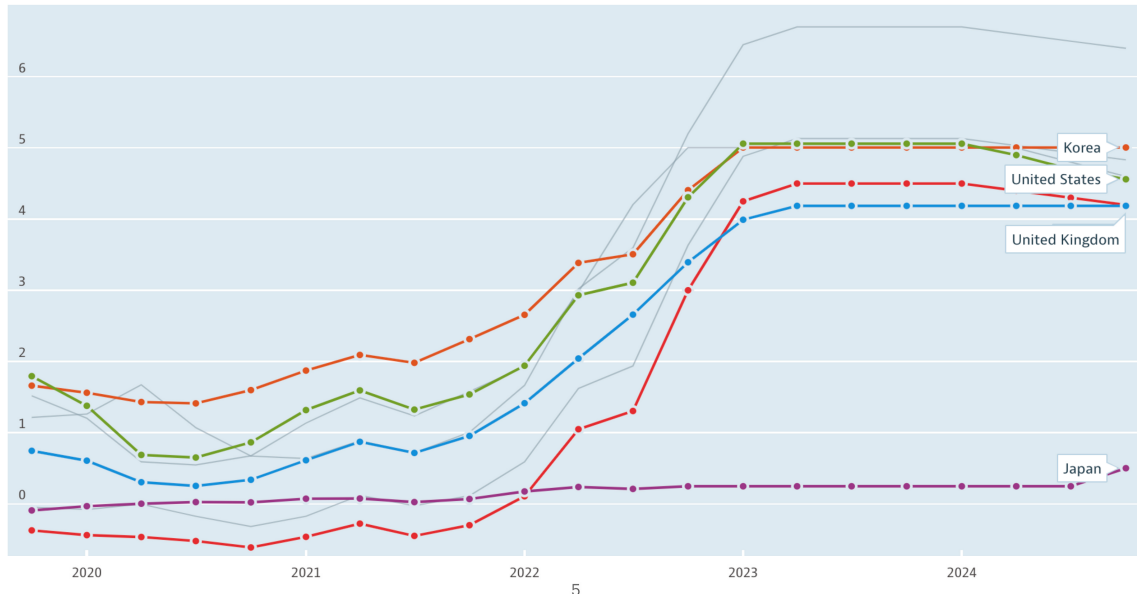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Inflation (CPI) fore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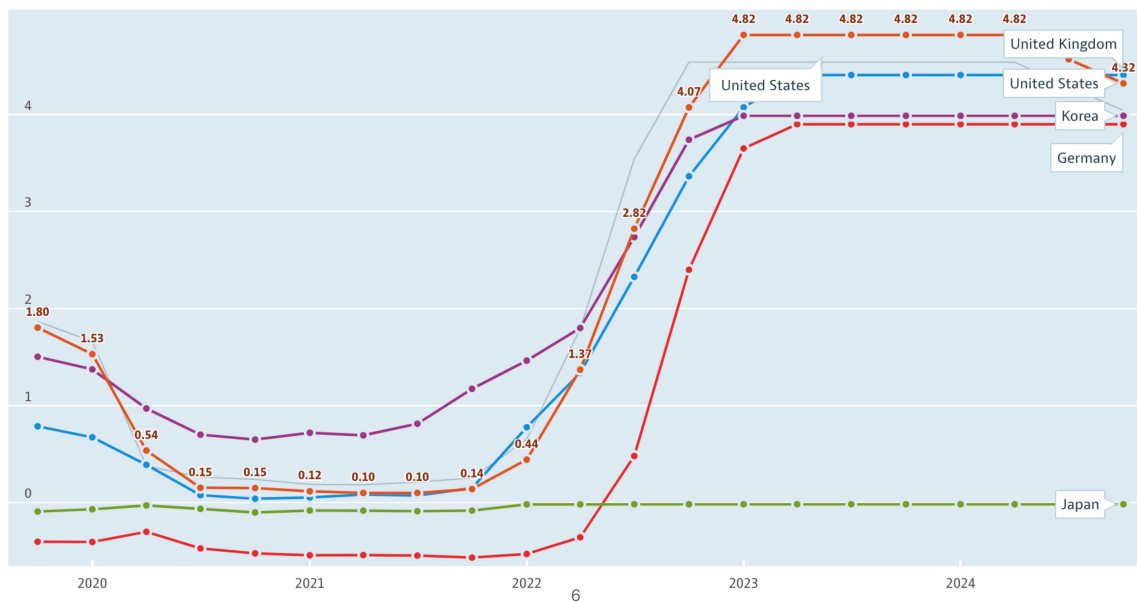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장기 이자율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단기 이자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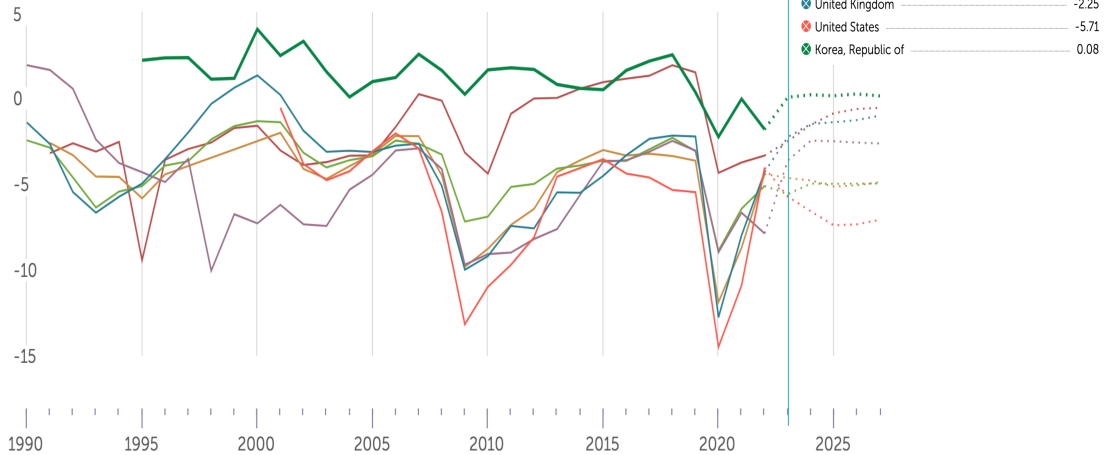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주요국 재정수지 전망

TREND (1990-2027)

% of GDP



자료: IMF, net lending/borrowing (overall balance)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GGXCNL_Goi_GDP_PT@FM/DEU/MAE/FRA/JPN/GBR/USA/KOR?year=2023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2022년 글로벌 경제와 2023년 전망

-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공급계약과 생산비용부담 증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이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확산시킴.
-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과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와 환율 급등 등으로 재정이나 경상수지가 취약한 나라의 경제위기 불안 고조 (영국의 파운드화 급락과 국채가격 폭락 사태)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시중에 풀려나간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 하락, 가계신용위축, 한계기업 증가, 금융시장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 최근, 미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금융시장 불안 지속전망
- 글로벌 경제와 무역 전망: 2023년 침체, 2024년 소폭 회복
주요국의 통화긴축/고금리 정책도 2023년 상반기부터 지나 당분간 지속전망
- 향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코로나 팬데믹 상황/미국과 선진국 물가상승 억제 여부/미-중 갈등(무역, 외교, 군사, 안보 등)

주요 선진국의 위기 대응

미국

- 긴축적 통화정책, 금리인상; 부자증세 통한 재정확충과 위기대응을 위한 지출확대 병행
-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부문의 국내 공급망 구축
- 대중국 기술압박, 주요 첨단제품의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협력질서와 공급망 재편(e.g., CHIPS 4);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 해소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에 투자,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국 내 투자유치 및 대중국 기술압박(중국, 러시아 등과의 투자 및 부품/최종재 거래 제한 조치), 대기업과 고소득가구를 겨냥한 부자증세로 7400억 달러 규모 재원 확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국민 건강보험 처방약 인하 등 4,400억 달러 규모의 지출계획

9

주요 선진국의 위기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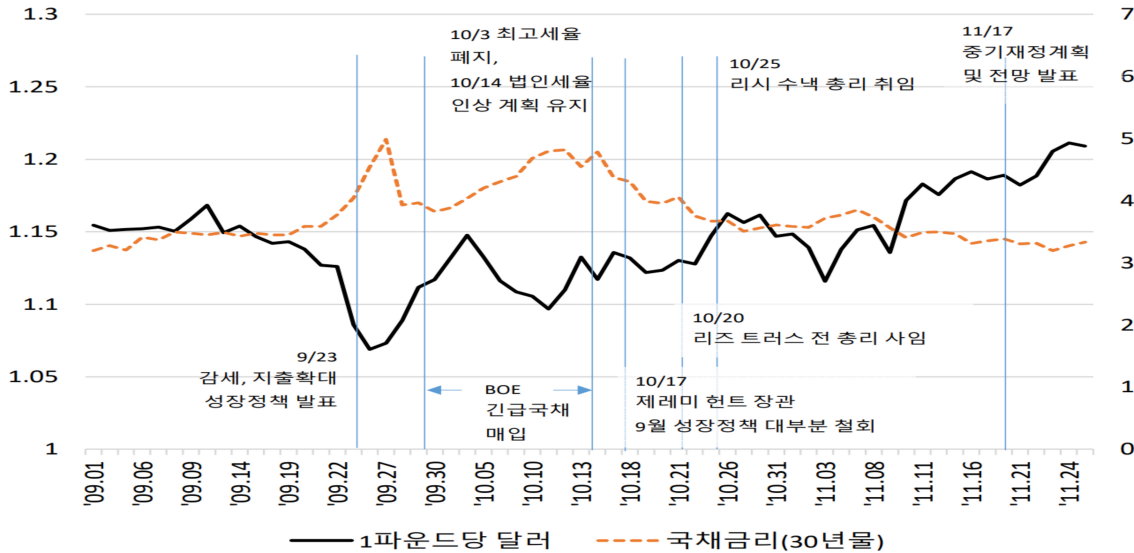
영국

- 영국 트러스 총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촉발한 위기:
최고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 대규모 부자감세안 발표 ->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영국 정부에 대한 불신 확산, 영국 국채 가격 급락, 금리 상승, 영국 파운드화 가치 폭락 -> 영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 확산
-> 44일만에 총리 사임과 정책 철회
- 신임 리시 수백 총리의 중기재정정책: 최고소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법인세 인상, 에너지 기업 초과이윤세 확대 등 부자증세로 정부수입 확대안 (GDP 대비 과세수입 비중 5년간 1%p 증가 목표)과 정부지출 감축안 +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보, 가계 및 공공서비스 지원 (에너지가격 보장 정책, 취약계층 지원, 건강-사회복지 서비스 및 교육 추가예산 지원)
- 영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 인력-인프라-혁신을 우선순위로 한 성장계획

10

주요 선진국의 위기 대응

영국



주: 왼쪽 축은 파운드당 가치로 1파운드당 달러이며, 오른쪽 축은 국채금리(30년물)이며 단위는 %임.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11. 28).

11

자료: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12.6, 원자료 Bloomberg

주요 선진국의 위기 대응

EU와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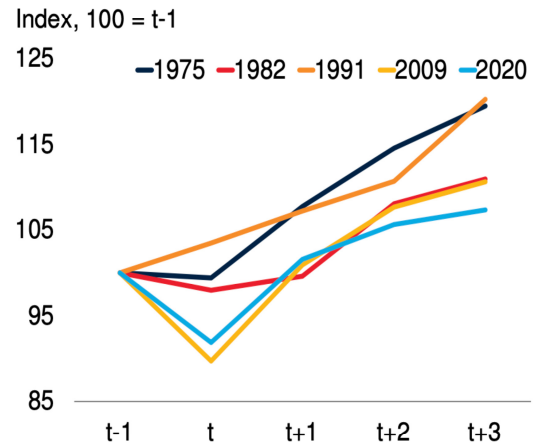
- EU의 Next Generation Fund: 8,069억유로 경제회복계획 (<https://next-generation-eu.europa.eu/>)
 - 에너지전환과 친환경
 - 디지털전환
 - 보건강화(보건위협으로부터 안전 확보)
 - 청년세대의 교육과 창업투자
 - 사회적 연대
- 독일, 프랑스의 주요 에너지 기업 국유화; 유럽 선진국들의 황재세 도입 확산;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GDP의 1.2% 재정지출(2022년) -> 2023년 2% 상향 계획 (EC 2022)
- 일본: 39조 엔 규모의 인플레이션 대응 재정정책 (에너지 요금 보조, 임금인상 지원 등)
- 주요 선진국의 적자 재정수지 전망은 이런 지출확대 정책을 반영; 한국의 재정수지 추이와 전망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흑자

12

2023년 이후 전망

복합적 불확실성과 더딘 회복

- 주요 선진국들의 동시 긴축 통화정책
-> 글로벌 경기불황
- 과도한 동시 긴축의 가능성 (World Bank, OECD, IMF)
-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무역 성장률 회복이 다른 경제위기와 비교할 때 가장 더디게 이루어질 전망
- 글로벌 경제의 정치경제적 혼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무역질서의 파편화 가능성
- 지체된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재난 증가로 인한 혼란 가중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무역성장률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Haver Analytics; Kose, Sugawara, and Terrones (2020); World Bank.

13

2023년 이후 전망

- 미국: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 지속, 물가 상승률 하락세 전환 그러나 고금리 지속, 낮은 성장률 (0.5%) (World Bank 2023; OECD 2022.11.)
-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높은 에너지 가격, 고금리 지속될 경우
-> 낮은 성장률 (0.0%) (World Bank 2023) (OECD 2022.11월 전망은 0.5%)
(관광호황, 팬데믹 이후 소비회복 등이 성장률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중국: 성장률 상승 전환 (2.7% -> 4.3%) (World Bank 2023)
- 팬데믹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 미국의 견제와 무역질서의 파편화 등의 요인에 따라 높은 불확실성
- 중국 제외한 신흥시장과 개도국 진영: 성장률 하락 (3.8% -> 2.7%) (World Bank 2023)
- 환율 급등, 자본 유출, 금융위기의 위험 지속

14

2023년 이후 전망

글로벌 패권경쟁과 무역질서의 재편

-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 수정? 어떤 새로운 무역질서로 재편될 것인가?
 - 약탈적 재편이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편이나? 양자의 타협점으로 수렴 기대
 - 초강대국 미국의 단일 패권에 의한 약탈적 재편 노력 지속;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실현가능한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
 -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결핍(선진국 진영 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경제의 갈등) -> 기후위기 대처 실패로 지속가능성의 위기
- 대한민국의 길은? 대한민국의 선택은?
 - 국익과 주권이란 기틀 위에서 평화, 자유,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가 구체화 될 수 있어야
 - 미국과 일본 등이 자국 이익에 따라 재단한 보편적 가치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과 주권의 옷을 입은 보편적 가치론이 필요

15

팬데믹과 대전환기, 경제정책의 새흐름

주요 선진국 경제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포용국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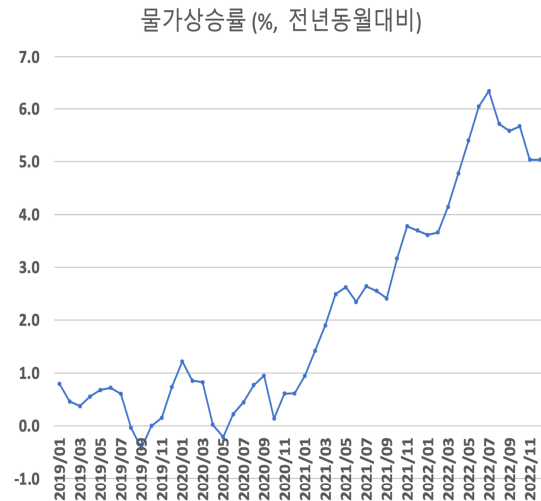
- **보수도 진보도 포용국가 전략**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재성찰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적 연대 강화
-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성장
- 기후재난/보건 위험에 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
- 에너지/디지털 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정부의 리더십
- 정의로운 전환
-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과 재정정책의 중요성
- 무역질서 재편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연한 접근: 경제적 실리 추구하고 안보의 이중 전략

16

한국경제 진단

물가

- 인플레이션은 2022년 7월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5%)
- 고물가와 고금리로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 크게 증가
- 고물가로 가계 생활비 크게 증가
- 2023년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락 속도는 느릴 것으로 전망
- EU와 북미 보다는 물가상승률 낮음
 - 원유, 가스 등 연료와 식품 원자재 가격 인상과 같은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큼 (OECD Economic Outlook 2022(issue 2), p.19, 미국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수요 측 요인 큼), 향후 공급 측 요인은 해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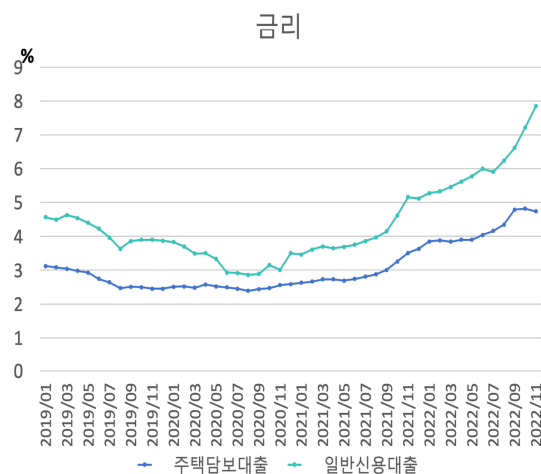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7

한국경제 진단

금리

- 금리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중 (21년에 비해 금리가 2배이상 증가): 이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
- 고물가-고금리는 현재 미국 등 다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현상 (원인도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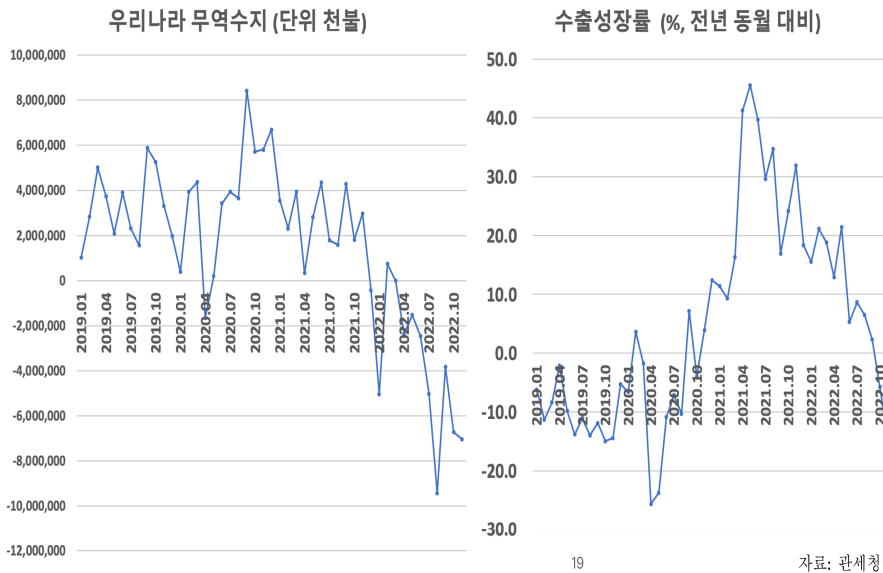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8

한국경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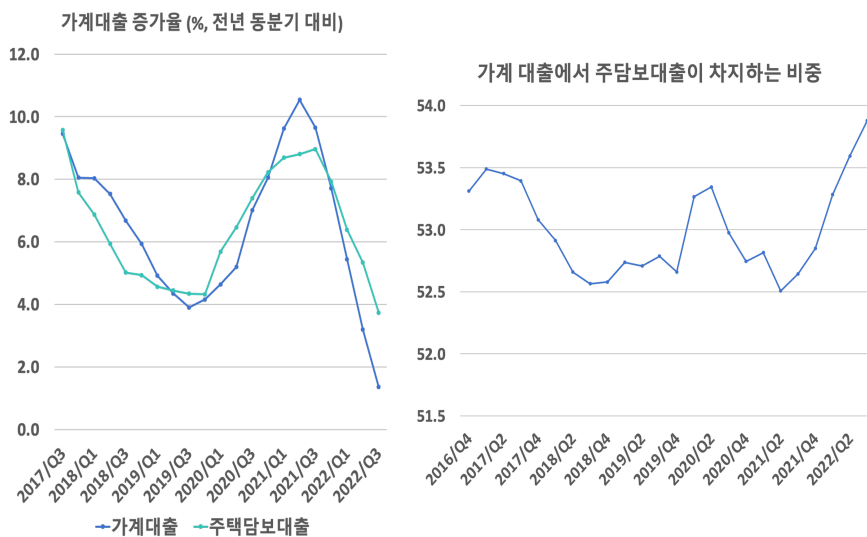
무역동향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지속
- 주요인: 반도체 수출의 감소, 중국경제의 급격한 위축 -> 대중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
- 올해 세계 경제 침체가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과 경기회복도 변수.
- 구조적인 변화: 향후 주력 수출 상품의 구성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차전지, 배터리, 엔터 및 미디어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 특히 엔터 및 미디어 수출액이 2차전지와 배터리 보다 훨씬 큼)

한국경제 진단

가계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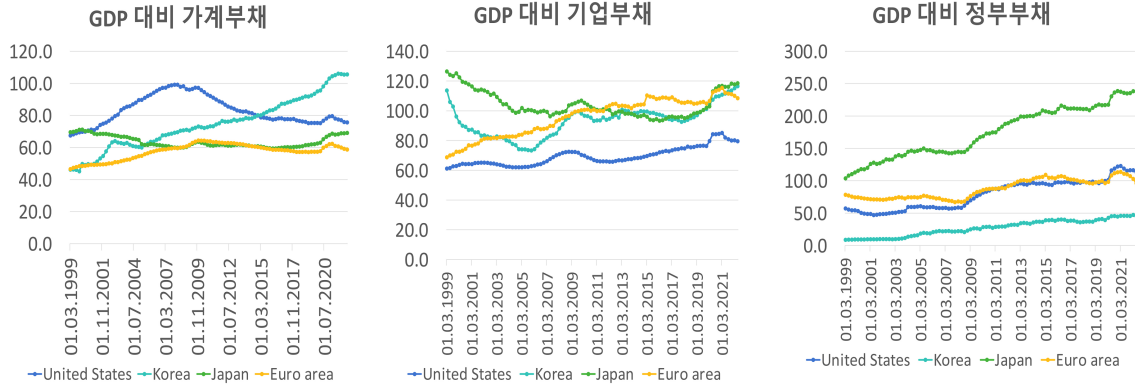


- 가계대출 증가율은 21년 2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
-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1년 3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
- 이는 고금리와 유동성 축소로 가계의 신용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

한국경제 진단

가계, 기업, 정부 부채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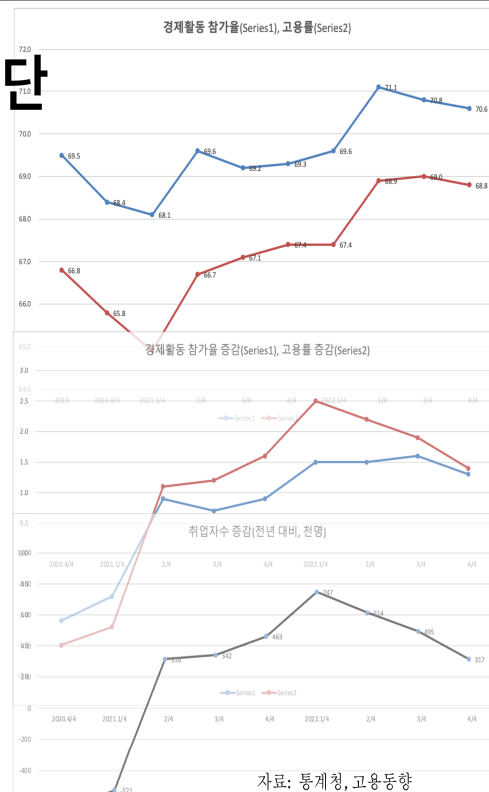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다른 세나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훨씬 높은 비중임
- 일본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

21

한국경제 진단

노동

- 2022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큰폭 상승 (역대 최고치 경신)
- 취업자수 증가도 15세 이상 81.6만명으로 역대 3번째로 높았음
- 2022년 중반 이후 고용지표 개선 정도는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비해 고용성과는 이례적으로 높았음.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한 취업자수 증가. - 2023년은 취업자수 장기추세 수준으로 조정되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크게 하락(기저효과+경기둔화, 인구), 고용률은 2022년 수준을 유지, 실업률 소폭 상승 (2022년 연간 고용동향 분석 자료)
- 2022년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 하락 (OECD Econ Outlook 2022)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22

한국경제 진단

경제회복을 위한 글로벌 경제의 여건

- 모든 나라의 위기는 국가 간 경쟁과 추격의 기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이 유럽 선진국 그리고 일본과 경제발전 격차를 줄이는 기회.
 - 중국경제의 성장(10%대 성장률)이 글로벌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이끔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대중무역이 한국 경제성장을 뒷받침.
- 2023년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차이점:
 - 중국경제의 저성장
 -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협력 관계의 질적 변화 (중국과 경쟁 산업 부문의 확대)
 - 미국의 대중국 경제압박과 중국을 배제한 우방국/동맹국 중심의 협력 강요
 -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

23

한국경제 진단

강점과 약점

- 한국경제의 강점: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크라이나전쟁의 에너지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 안정적인 코로나 팬데믹 극복
 - 에너지/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첨단 산업의 경쟁력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국가부채
- 한국경제의 약점:
 - 높은 대중무역 의존도로 미중간 무역갈등에 취약한 글로벌 협업관계
 - 정전체제와 북핵문제, 미, 일, 중, 러 등 주변국 갈등 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 뒤쳐진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섬과 같은 불리한 지정학적 여건
 -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노동시장
 - 취약한 사회안전망; 높은 가계부채 비중
 - 후진적 제도역량(민주주의 성숙과제, 불투명성과 부패, 불공정한 시장경제, 정실자본주의)

24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시장의 자율적 질서를 강조하고 작은 정부 추구,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확대,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소득분배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아젠다
- 법인세 인하, 중부세 인하(다주택자 증과세 철폐) 등 부자 감세 기조
- 건전재정기조와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 3% 미만 유지
- 친기업-반노동적 노동시장 정책
 - 노동시간 규제 완화안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로 확대하는 등 주간 최대노동시간 규제완화)
 - 노조와의 전쟁?: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사례
- 공공부문 축소와 자산 매각: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축소, 민간위탁, 민간이양 등 공공부문의 사업 축소와 민간사업 영역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보건의료, 교육, 언론, 공공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완화

25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문제점

- (영국 트러스트총리를 최단기에 실각시킨) 30년 전의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 아젠다의 부활과 2020년대의 세계사적 변화에 역행;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지상주의 이외에 경제정책의 큰 틀과 비전 결여
 - 지금처럼 세계경제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성이 큰 국면에서 이런 낡고 허술한 틀 만으로 대처하겠다는 매우 안이한 자세
- 건전재정기조와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 3% 미만 유지: 경제위기 국면에 정부의 손과 발을 묶는 것.
 - 대전환기 위기에 취약한 계층과 기업, 취약한 산업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역할과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국가재정이 미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적재적소를 찾는 것이 중요,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을 강조할 때가 아님
- 부자 감세 기조: 재정 지속가능성 저해, 긴축적 통화정책과 상충,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야기
 - 법인세 1%p인하로 매년 약 3.3조원의 세수감소, 상위 5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감소액 약 6,740억원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277호-브리핑, 2022.12.25)
 - 중부세 인하로 매년 약 1.8조원의 세수감소(5년간 9조3천억원 감소; 장혜영의원실 추계 2022.12.28)
 - 건전재정기조와도 모순

26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 노동시장의 친기업-반노동적 규제 완화
 - 노동시간 규제 완화안: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선진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반개혁 정책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화물연대 등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노조탄압 노골화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격차, 산업안전 등 중대 개혁과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 부재
- 공공부문 축소와 자산 매각
 - 자본의 이윤창출보다 기후재난, 보건위기 등 보호와 안전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 객관적 타당성도 없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성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공공성의 가치를 희생하는 소탐대실
 - 향후 보건의료, 교육, 언론, 공공서비스 등에서 이미 과도한 민간사업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과소한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추락.
-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의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정책과 로드맵 부실

27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노동개혁(?)

- 기괴한 개혁 아젠다: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의 부조화
 - 근로시간제도 개편 - 직무성과급 도입 -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 근로시간제도 개편: 우왕좌왕. 노동시간 단축 보다는 연장 -> 시대에 역행
 - > 2018년 52시간 노동제에 대한 합리적 성과평가에 기반한 개선안 마련 시급(52시간 초과 근무 노동자 수 절반 이하로 감소; 연간노동시간도 약 100시간 감소)
-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풀겠다며 직무성과급 도입 주장; 임금 격차의 문제를 노동자 간 분배 갈등의 문제로 축소; 이중구조의 원인을 기업규모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로 보는 학계의 통상적 인식에 반함
- 노조에 대한 반감, 노노 갈등 조장: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화물연대 등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노조탄압 노골화, 노조회계 투명성 논란으로 불신 야기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격차, 산업안전 등 중대 개혁과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이 부재하거나 개악

28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책

- 결혼·출산·양육의 기능적 문제에 집중하고 기능적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구조적 문제 회피; 성평등과 관련된 대책 전무
- 사회경제적 환경과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 효과가 없다는 과거의 교훈을 망각
- 기존 정책의 나열; 구체적인 내용 부재
- 지난 4차 계획의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 책임 완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포괄적인 성·재생산권 보장 △젠더폭력 피해 구제와 예방 등 “성평등 제고를 위한 목표와 추진 과제” 삭제
- 돌봄노동자의 고용지위, 노동환경 개선안 부재; 국공립 확대와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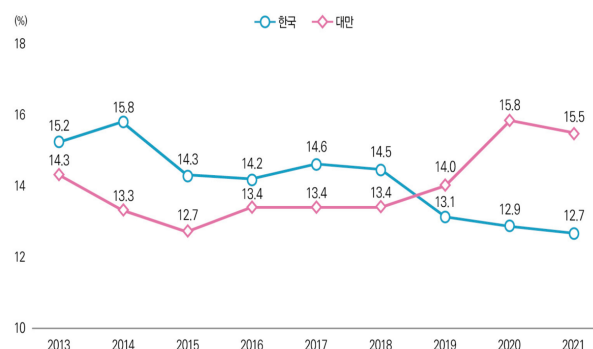
29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국제 통상

- 무책임한 탈중국론과 대안 부재
 - 중국의 산업기술 발전, 중간재 수입 대체와 내수 강화 정책에 따른 글로벌 협업 관계의 변화
 - 중국의 정보통신 분야 수입에서 대만과 아세안 제품이 한국 제품을 대체하는 추세;
 - > 한국, 중간재 교역 중심의 대중국 무역 구조의 변화 필요; 탈중국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진화 모색해야
- 아세안과 같은 대체시장 전략 불투명 (정체불명의 인도 태평양군사안보전략이 경제전략보다 우선)
 -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세안의 위상 증가 추세 (FDI 유입액 2016년 이후 급증)
 - > 아세안에서 미국, 일본과 차별적인 한국의 위상 정립 필요; 아세안 경제개발과 한국 공급망 전략의 상생협력
- 미국과 EU의 보호무역주의 규제 (IRA, CRMA) 강화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는 외교적 노력 필요

중국의 중간재 수입 중 한국과 대만의 비중 추이



자료: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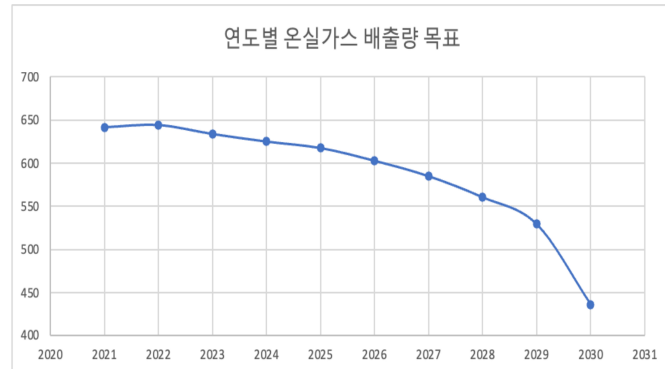
그림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경제현안 분석, VI 장>

30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에너지 전환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탄녹위 통과(4월 10일)
 - 산업부문의 감축 비중을 3.2%포인트 줄이고
 -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에 의존
- 감축계획: 임기말 2026년까지 2030 감축 목표 총량 205(백만톤 CO₂e)의 20%에도 못미치는 38.8 감축
 - 다음 정부 4년간 나머지 80%이상 감축한다는 계획
-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키우기 보다는 원자력 의존도 높 이거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CCUS에 의존한 무 책임한 방향



자료: 2023년-2030년 목표 자료는 국무조정실 4월 10일 보도자료
2021년 실적자료, 2022년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10월)

31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신자유주의와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 성장지상주의와 단기주의(shor-termism)의 폐해: 구조개혁과 중대과제를 공격하는 수단
- 낡은 신자유주의 아젠다와 단기적 성장지상주의를 폐기하고, 장기적 지속발전을 추구하는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정책전환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2019)
 - 미국, 일본 등 포용국가 전략 사례; 한국적 특수성 반영
 - 선진국 모두 포용국가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치적 보수와 진보와 무관
 - 국가의 진보냐 퇴보냐의 문제
- 인적자본과 역량강화에 의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 시장 불평등 완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사회복지 확충
 - 소득, 취업, 창업, 교육 등 계층 간, 성별 간, 지역 간 기회평등에 기초한 인적역량 강화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2019; OECD,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2018)
 - 사회적 역량강화: 각 부문과 조직의 투명성 제고, 제도 선진화, 성숙한 민주주의, 공정시장

32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신자유주의와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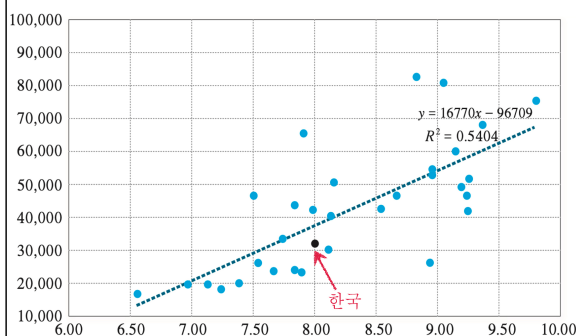
- 민주주의의와 경제발전: “민주화”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을 20% 상승시킴. (Daron Acemoglu, et al. 2019: “Democracy does cause growth”, J of Political Econ, 127)
 - 민주화 -> 교육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투자 강화; 반독점 규제, 창업과 기업성장 등 경제적 기회평등 ->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원동력
- ‘모든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예외 없이 복지국가로 발전했고 ... 자본주의의 폐해를 해소하는 규제장치 구축....이런 복지[국가] 개혁이 없었다면 자본주의의 존속[지속적 경제발전]은 어려웠을 것’ (Gabriel A. Almond, 1991, “Capitalism and democracy”,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4)
 -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중진국 추월의 기반은? 1987년 이후 민주화
 - 유럽과 북미 선진국 추월의 기반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 **정부와 시장의 투명성**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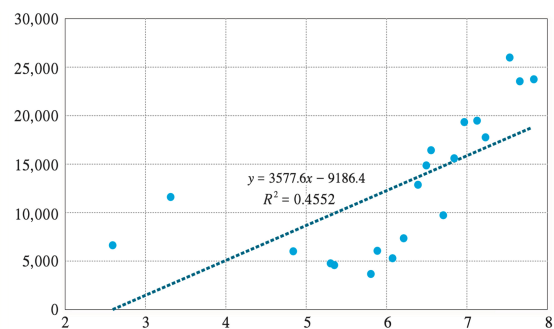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신자유주의와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민주주의지수(EIU)와 1인당 GDP의 관계



주 : 중동, 홍콩, 싱가포르 제외한 GDP 상위 30개 주요국 자료. 한국은 검정색 점.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민주주의 지수, 2020년), IMF(1인당 국내총생산, 2019년)



주 :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들 중에서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나라들에 대한 자료.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민주주의 지수, 2020년), IMF(1인당 국내총생산, 2019년)

그림 출처: 주병기 외 (2022): <정의로운 전환>, pp.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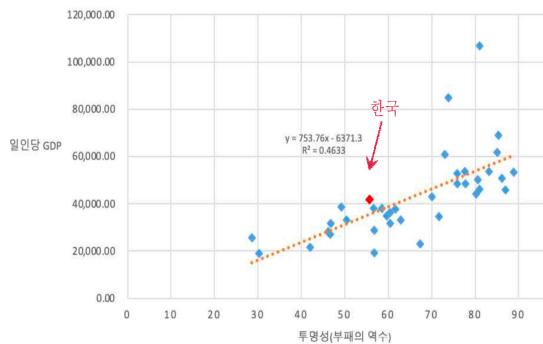
34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신자유주의와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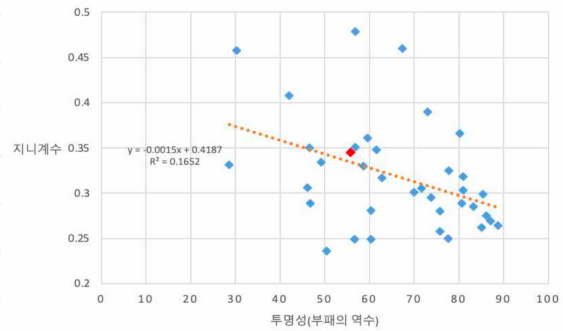
(중대)부패, 경제발전, 불평등

〈그림 4〉 부패와 경제발전
(Figure 4) Corrup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자료: OECD Statistics. 2015년~2019년 투명성(5년평균)과 2019년 일인당 GDP의 관계

〈그림 5〉 부패와 불평등
(Figure 5) Corruption and inequalities



자료: OECD Statistics. 투명성(2015년~2019년 5년 평균)과 지니계수(2016년~2018년 중 최신훈)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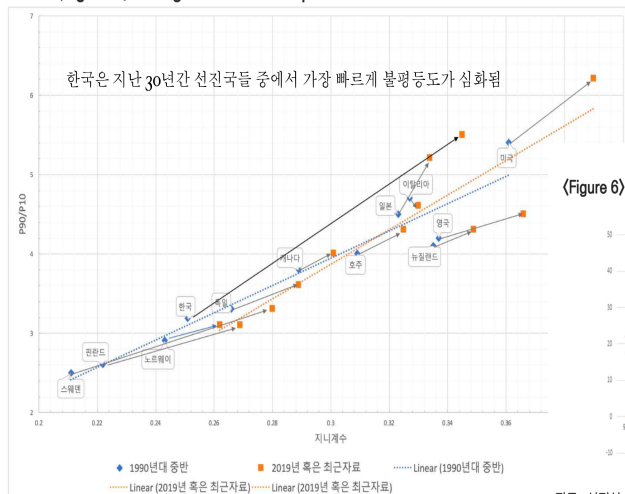
그림 출처: 주병기 (2021): “공공성의 경제학과 한국경제”, 한국행정학보, 55.

35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신자유주의와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그림 3〉 소득불평등의 변화: 1990년대 중반에서 2019년까지
(Figure 3) Change of income inequalities between mid-1990s and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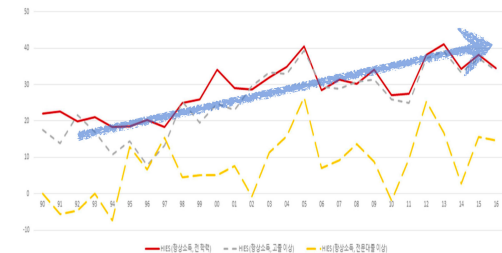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최신훈. 한국은 통계청(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불평등(계층 세습)

기회불평등도 역시 지난 30년간 2배 이상 상승하여 계층세습화 경향도 빠르게 진행

〈그림 6〉 부친의 학력환경 하 개천용기회불평등 지수 장기추이
(Figure 6) Long-term trend of inequalities of opportunities for income among socioeconomic classes



자료: 신지섭·주병기 (2021),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36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복합위기 대응

- 팬데믹, 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중국 견제와 무역 질서 재편 등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통화긴축과 고금리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의 금융안정정책
- 재정정책: 취약계층과 부문에 대한 지원 + 중장기 대전환 투자 + 재정지속가능성 강화
 - 긴축적 통화정책과의 조화 (물가상승 압력 추가 없이)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취약 가구와 취약 기업 겨냥한 지원 확대
 - 에너지 소비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동시에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 디자인
 -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정책 (재정지원, 공급다변화, 소비감축 등)
 -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의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강화
 - 부자증세, 횡재세 도입 등을 통한 재정확충

37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복합위기 대응

- 대전환(에너지/디지털 전환, 복지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 기후위기에 대비한 투자 확대: 공공부문을 통한 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
 - 에너지전환과 그린 산업에 대한 규제와 공공 거버넌스를 통한 투자 활성화
 -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기반한 공공 거버넌스 구축 (합리적 에너지 가격결정 기구;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합리적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 확립)
 - 저탄소 기술 도입의 유인을 강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확대, 탄소배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보조금 축소/패널티 확대 등)
- 에너지/플랫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 직업/평생 교육, 일자리 전환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노동의 질 유연화), 플랫폼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력 균형을 위한 규제,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자의 협상력 제고 방안(플랫폼 공정화 규제)

38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복합위기 대응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 한, 미, 일 군사와 안보 협력: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
 - 남북관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제시 필요 (현재 상호 비방과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는 국면으로 리스크 증가)
- 대외 공급망 다변화와 소부장 산업 국내 공급망 강화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 국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지속
 - 중국의 산업 발전과 내수 중심의 국내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대중국 통상 전략과 한중 협력 관계 모색;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EU,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
 -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공급망 확대 전략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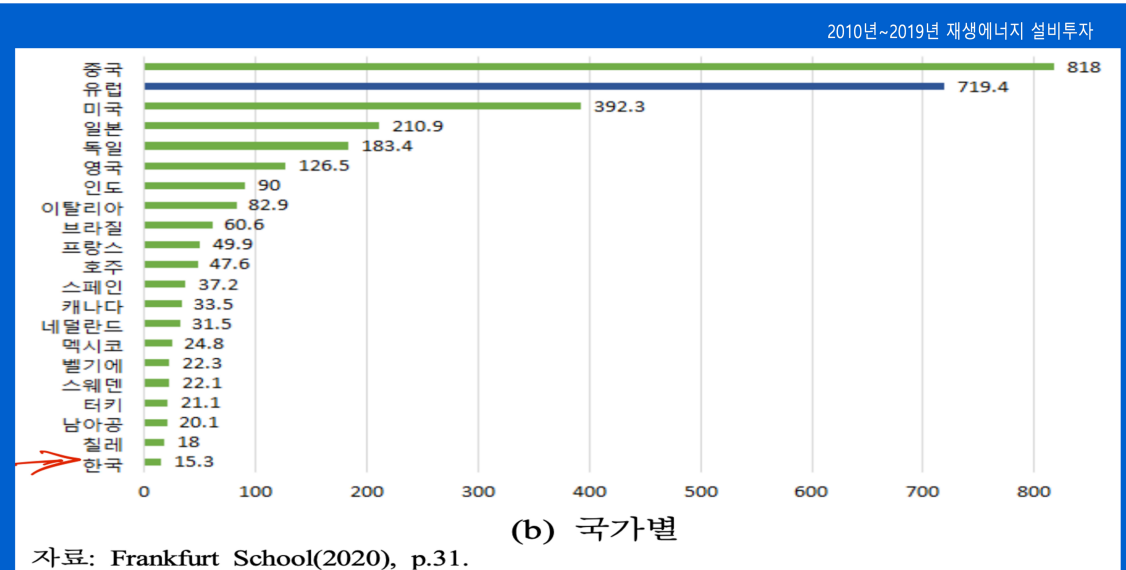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인적자본과 역량 기반 강화

- **인적역량** 강화와 인적자본의 고도화
 - 노동시장 선진화 (건강, 안전, 일-여가 균형을 저해하는 문제 해결; 격차해소, 노동시간 감축)
 - 교육 선진화 (교육격차해소, 평생/직업 교육 확대, 고등교육 강화 등)
 - 복지 선진화 (사회복지, 의료/고용/연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질적 개선)
- **사회적 역량** 강화
 - 사회 투명성 강화 (반부패; 법치주의; 사법개혁)
 - 시장 선진화 (정실주의 타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힘의 균형)
 - 성숙한 민주주의 (법 앞의 평등; 언론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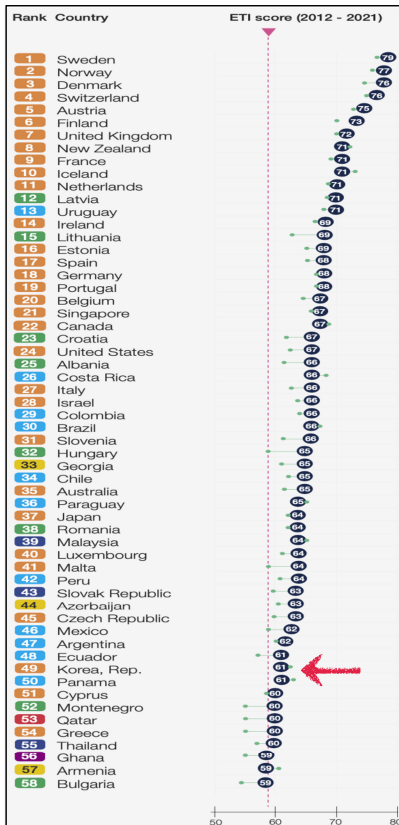
40

2010년~2019년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국가 별 비교



출처: 조일현 이재석,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2020

41



World Economic Forum (2021년 보고서)

에너지전환지수 (ETI)

대한민국: 49위

선진국 최하위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 매우 큼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역량과 지정학적 여건은 최악임에도 가장 빨리 감축해야 하는 절박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급속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30년 앞을 내다 보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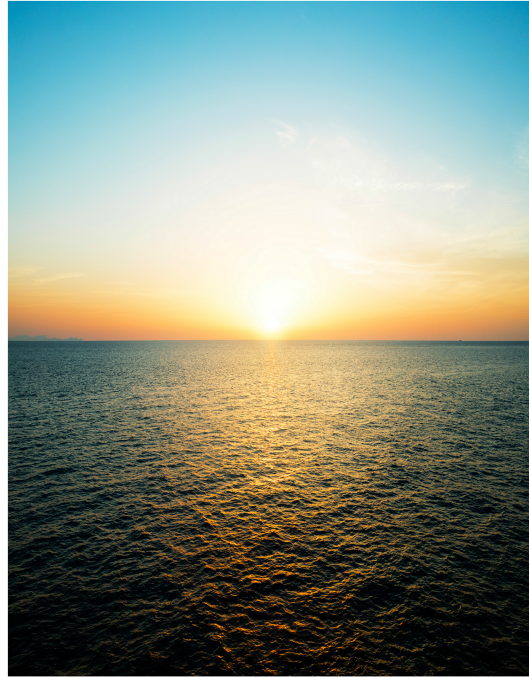
한국, 2030년까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급격히 감축해야!

국가	NDC	배출정점부터 2030년 NDC까지의 연감축률 (배출정점 연도)
EU	1990년 대비 최소 55%	-1.98% (1990)
독일	1990년 대비 65%	-2.59% (1990)
프랑스	1990년 대비 40%	-2.27% (2005)
영국	1990년 대비 68%	-2.91% (1991)
미국	2005년 대비 50-52%	-2.73% (2005)
캐나다	2005년 대비 40-45%	-2.33% (2007)
호주	2005년 대비 26-28%	-2.75% (2017)
일본	2013년 대비 46%	-3.56% (2013)
중국	탄소집약도 기준	-0.95% (2019)
한국	2018년 대비 40%	-4.17% (2018)

자료: 세계은행, IEA, Our World Data와 각국의 NDC를 이용하여 계산.

42

The time is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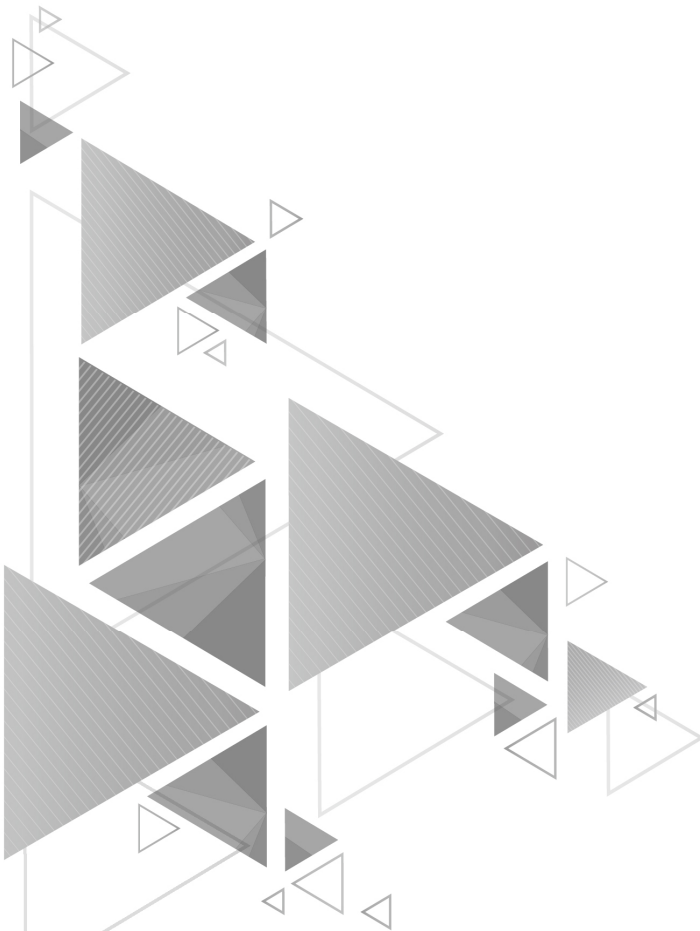
43



발제 2

민생경제 부문

위평량 소장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민생경제 정책 평가 20230413

진정한 민생(경제) 위한 rhetoric & populism 정책의 대전환

2023.4

위평량 소장(경제학박사)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I. 윤석열정부 민생경제 1년 회고

1. 정책방향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제시, 6대 국정 목표, 120대 세부 국정과제
-경제운용 목표와 운용기조, '저성장 극복, 성장-복지 선순환', 그리고 '자유-공정-혁신-연대' 제시
-저성장시대 진입 원인과 배경을 단순히 '규제로 해석' 잠재성장능력 제고시킬 획기적 전략 실행 미흡

○영미 주요 선진국은 OECD안(4단계 대응방안, 2020)과 유사한 정책 vs. 한국정부 방향성 차이
-IMF(2022.3), 한국의 경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화 및 재산세 인상 등 강조
-한국, 특히 증세 정책이 핵심적임에도 오히려 재벌대기업부자감세 정책, 부동산관련 제도 대폭완화, 결과적으로 가진자 위한 정책,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유인 정책으로 공동선(common good) 앎을

○민생(경제) 활성화 반복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적 기조(즉 지배계층과 상위소득자,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과거로 회귀)로 실질적인 효과 부족
-정부정책 기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국가재정전략회의(7.7)',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추진 현황 및 계획(7.14)', '2022년 세제개편 안(7.21)']; 대주주, 자본가, 부유층과 기득권 중심 정책, 민생경제정책의 비효과적
-EX) 30조원 새출발기금(2022.10.04.)운영. 2월말 기준 1만8984명, 채무조정액 2조8300억 원 규모(캠코,2023.3.9.) 불과
-여러 민생경제 정책 실행 중, 그 효과 또는 성과 확인하기 어렵고, 만족하는 사람들 매우 소수에 그침

2. 2023년 민생경제 회복지원

물가 안정	-세제 및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필수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 유도 i)유류세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지급연장(~23.4) ii)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 감면(15%)조치 연장 iii)농축수산물 할당관세와 예산지원 iv)수급관리 등으로 가격안정 도모 및 공공요금인상 요인 최소화 등	-에너지·먹거리·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서비스 가격 안정 -유통고도화, 선제적 수급조절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생계비 부담 경감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및 임차인 주거 부담 경감 i)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80%)을 6개월 연장 ii)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기준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iii)1학기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iv)유치원 유아학비지원 3년 연장 v)취약계층의 에너지·먹거리·생필품 등 핵심 생계비지원 강화 vi)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4억 원으로 상향 vii)전월세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등 제시	-교통·통신·교육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의 에너지·먹거리·생필품 등 핵심 생계비지원 강화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및 전세사고에 따른 피해 지원 조치 강화
약자 복지확충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보장 i)노인 기초연금인상:30.8만원(628만명)→32.2만원(665만명), ii)위기청소년 생활지원확대: 월 최대55만원→65만원 iii)장애인연금 월 최대 38.8만원→40.2만원: 장애수당 50%인상 등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근로·자립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 등 시스템 보완
고용 안정	-맞춤형 일자리 및 재정지원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대응 (청년)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부담경감 등으로 17만+α명 지원 (고령층) 한국형 계속고용모델을 논의하는 가운데 고령층경제활동참여 제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부담 완화 병행 검토 (여성)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여 경제활동참여유도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당면한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즉시 조치 가동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당면 어려움 해소 및 중장기 경쟁력·활력 제고 지원 비용부담 완화·재기지원·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폐업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평당13만원)과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로컬 브랜딩, 로컬 상권 활성화 등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	-비용부담 완화·재기지원·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

자료 : 기재부 2023 업무보고, 홈페이지 등 필자 재구성

2-1) ‘소상공자영업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정책

i)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온전한 손실보상?	
ii)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구조적 고정비절감, 안정적 매출유지, 특히 한계 봉착 사업자의 전환 등을 감안한 선별적 지원	
iii)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 촉진 →매출연동임대차제도	
iv) (경쟁력 제고) S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기존사업자(오프라인) 경쟁력 약화 추세 고려? 신규 진입자-기존사업자 맞춤형·특화 정책 필요	
v) (디지털 전환) 전담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시장생태계 공정성,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vi) (민간 주도 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 발전소 조성 →소비자 편익 고려, 각 전통시장 지속가능성.	

○대선공약과 120개 국정과제, 6차 민생경제 회의(2022.8)발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계획(7.15) 등

○부자감세와 법인세인하, 종부세인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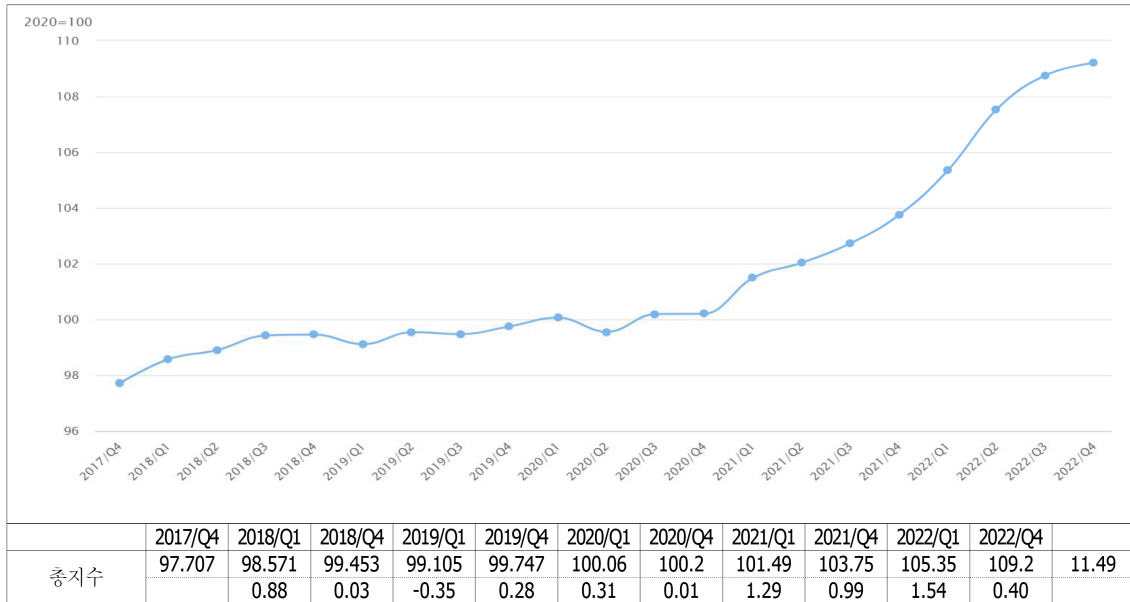
→부자소비 국내? 해외 및 명품소비 집중, 법인세감소 투자증가 가능성 있으나 실질적 도움은 투자보다는 사내유보로 집중 될 것이며 대주주와 오너의 경제적 이익에 집중 됨

○시장의 불확실성 심화. 미래가 어찌될 것인가? 경제상황이 어찌될 것인가? 개인, 사업자 각자 예측으로 행동

II. 민생실태

1. 생활부담과 삶의 고통, 물가상승, 금리상승, 집값 급변, 일자리 불안정 등 미래 삶에 대한 걱정 태산

1) 소비자물가지수(CPI)



원자료 : 통계청, 필자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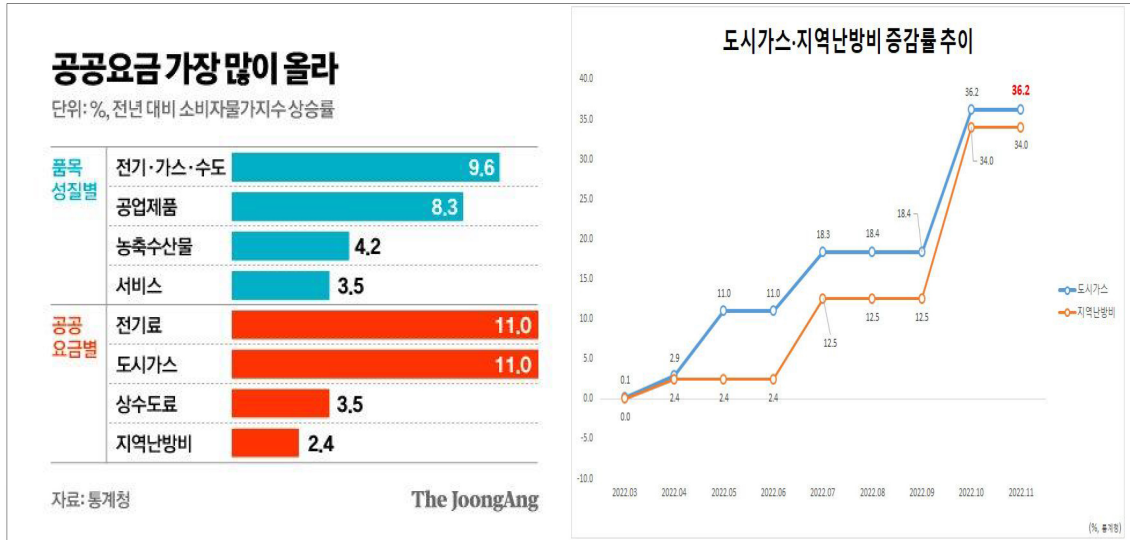
-CPI ; 가계지출 중 구입 비중이 큰 460여 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기준 추정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

1-1)영역별 CPI(2020=100)

	2017/Q4	2018/Q1	2018/Q4	2019/Q1	2019/Q4	2020/Q1	2020/Q4	2021/Q1	2021/Q4	2022/Q1	2022/Q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92.092	94.612	96.755	95.913	96.153	97.29	102.53	104.97	107.27	109.32	113.56	21.47
		2.74	-0.80	-0.87	0.84	1.18	0.61	2.38	0.94	1.91	-0.99	
의류 및 신발	98.638	98.924	99.413	99.216	99.702	99.73	100.26	100.23	101.31	101.96	106.27	7.63
		0.29	0.28	-0.20	0.58	0.03	0.00	-0.03	0.93	0.64	2.52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97.836	98.275	99.014	99.447	100.108	100.54	100.25	100.81	103.13	104.29	110.71	12.87
		0.45	1.43	0.44	1.30	0.43	1.41	0.56	1.92	1.12	3.05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96.352	97.237	98.278	99.879	100.134	99.88	100.31	100.66	103.7	104.56	108.47	12.12
		0.92	0.15	1.63	0.24	-0.25	0.45	0.35	1.31	0.83	0.84	
보건	97.687	98.772	97.408	98.316	98.679	100.36	99.51	100.25	99.69	100.65	101.09	3.40
		1.11	-0.18	0.93	0.12	1.70	-0.13	0.74	-0.15	0.96	0.40	
교통	102.009	102.946	103.932	98.962	103.422	104.01	99.05	102.78	110.07	112.44	114.66	12.65
		0.92	-0.52	-4.78	0.69	0.57	-0.57	3.77	2.37	2.15	-3.54	
통신	105.74	104.777	103.913	102.6	101.662	100.7	96.14	99.26	99.21	99.59	100.68	-5.06
		-0.91	-0.35	-1.26	-0.30	-0.95	-5.46	3.25	0.33	0.38	0.70	
오락 및 문화	99.829	100.185	100.936	100.791	100.429	99.78	100.05	99.99	100.61	101.78	104.4	4.57
		0.36	-1.49	-0.14	-1.42	-0.65	-0.27	-0.06	-0.24	1.16	0.22	
교육	100.446	101.142	101.964	102.54	101.22	99.98	99.97	100.47	101.08	101.59	102.63	2.18
		0.69	0.16	0.56	-0.98	-1.23	-0.07	0.50	0.07	0.50	0.08	
음식 및 숙박	95.163	96.204	98.084	98.735	99.272	99.62	100.39	101.09	104.45	107.13	113.35	18.19
		1.09	0.37	0.66	-0.02	0.35	0.15	0.70	1.17	2.57	1.06	
기타 상품 및 서비스	95.931	96.109	96.737	97.619	98.308	99.6	100.25	101.42	102.28	105.67	110.66	14.73
		0.19	0.09	0.91	0.11	1.31	-0.15	1.17	0.12	3.31	1.24	

○채감물가와 CPI 큰 차이 체험, 시장상황 충분히 반영된 CPI 통계작성(미국과 한국의 CPI지수 상승 차이, 미국은 주거비 비중 32%, 한국은 9.8%에 불과 등)으로 제대로 된 재정 및 통화·금리정책 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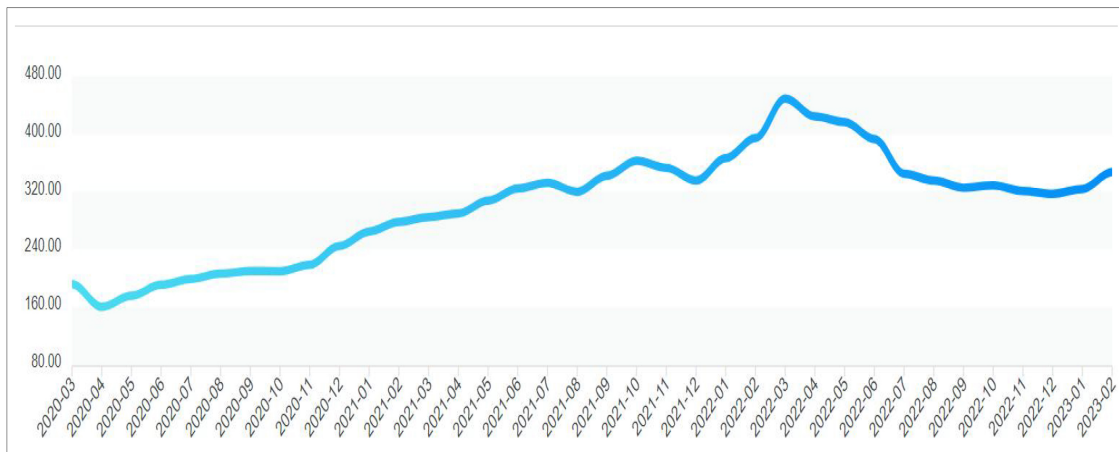
2) 공공요금



출처 : 중앙일보, 2022.06/ 헤럴드경제, 2022.12

2-1) 수입원자재가격 추세

i) 3년간 KOIMA지수(1995=100)



자료 : 한국수입협회

*KOIMA지수 : 69개 주요 수입품으로 구성, 8개 부문(농산물, 광산물, 유무기원료, 유화학원료, 철강재, 비철금속, 희소금속)지수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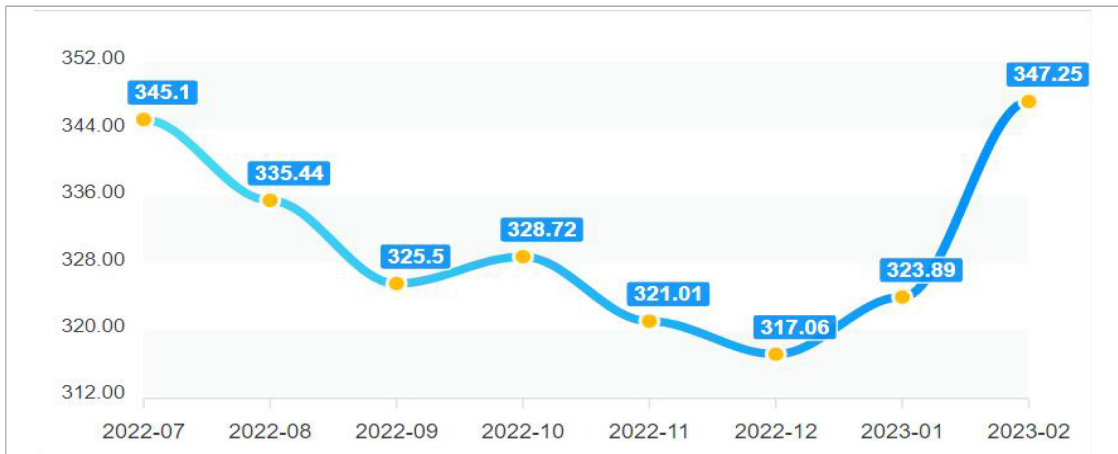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부터 원자재가격 상승세, 러-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이후 최고치, 1년 전부터 전반적인 하락세 이후 작년 11월부터 반등 추세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지역(경제권역)별 대응수준 및 그 결과의 차이에 따른 수급불균형(각국 폐쇄 및 이동통

제, 영업통제 등)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 공급시스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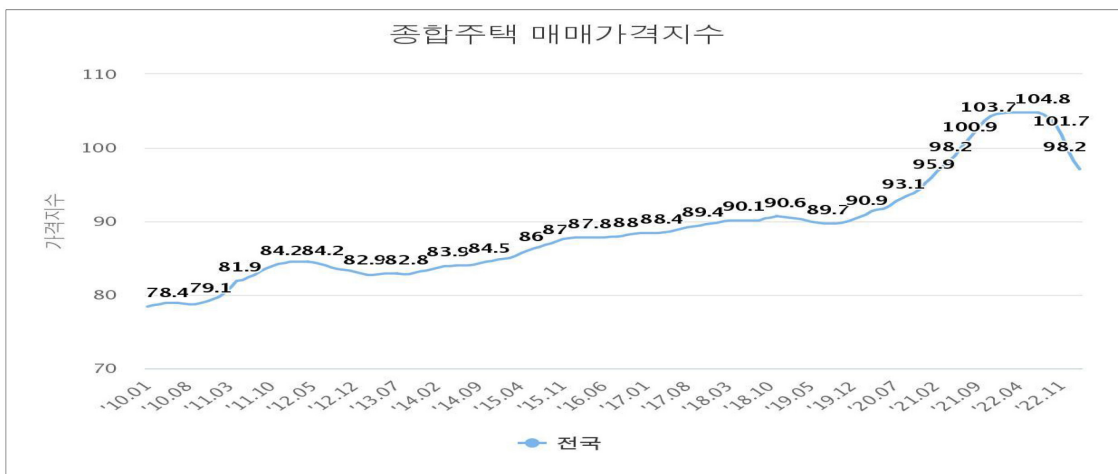
○ 영역별 차원의 변동은 농산물, 2022.7월 이후 지속하락세, 광산물, 2022.12월 이후 급등세, 유화원료 2023.1월부터 상승세, 철강제 2022.11월 이후 상승세, 비철금속 2022.11월부터 상승세, 희소금속, 2022.11월 이후 하락세

ii) 최근 8개월의 KOIMA 지수 변동



○원자재 자원빈국 한국, 수출 중심 경제 국가의 근본적 문제 완화를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전략수립 부족, 조속한 정책필요

3) 부동산, 집값 급등과 조정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저금리시대 건설산업과 부동산업 지원 위한 모든 규제 해소, 집값급등, 가계부채급등 주된 원인

-경기변동 시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건설업(부동산)정책 지원은 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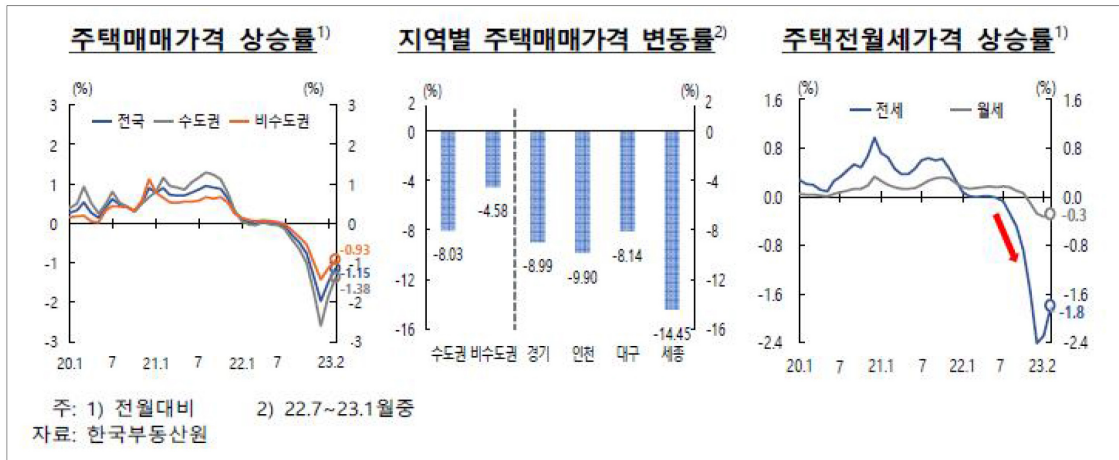
-자산양극화, 사회적양극화, 불평등 구조개혁을 하지 못한 한국에서 다루지 않아야 함에도 윤 정부 관련 규제해제

○건설산업 2021년 산업별 GDP성장 기여도(전년대비 단위 %p)'주요건설통계(2023.02)'

※건설업 -0.1, ※제조업 1.6, ※서비스업 2.1, ※농림어업과 전기·가스·수도업 각각 0.1

※GDP 내 산업별 생산비중 추이: 2017년 5.4%(제조업 26.6%) → 2022년 4.4%(제조업 26.7%)

3-1)주택지수변동



자료 : 한국은행, 2023.03 금융안정상황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최근 하락폭이 소폭 완화 되었으며 전세가격 하락폭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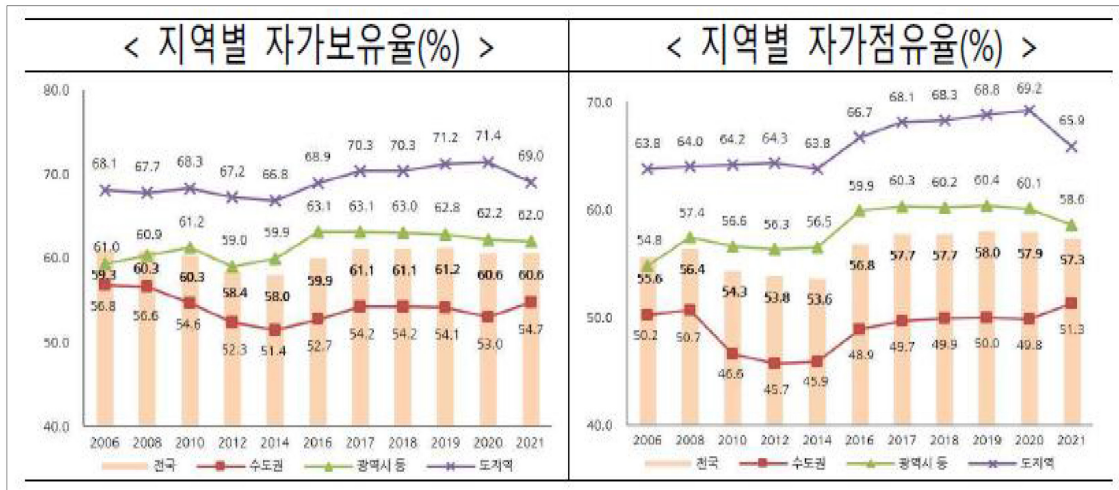
* 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 -0.77%(22.10월) → -1.37%(11월) → -1.98%(12월) → -1.15%(23.2월)

** 주택전세가격(전월대비): -0.88% → -1.55% → -2.42% → -1.80%

○LH, 광역 주택공사, “위기에 직면한 한계차주” 주택 매입→재매입 옵션→임대료 주거권보장 강화 및 확장 필요

○한국형 책임분담 모기지제도(주택가격 모기지 상환금액 아래로 떨어질 경우 은행도 손실 분담 방식), 지속적인 워크아웃형 모기지제도 필요

3-2)자가보유율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2022.12.21.,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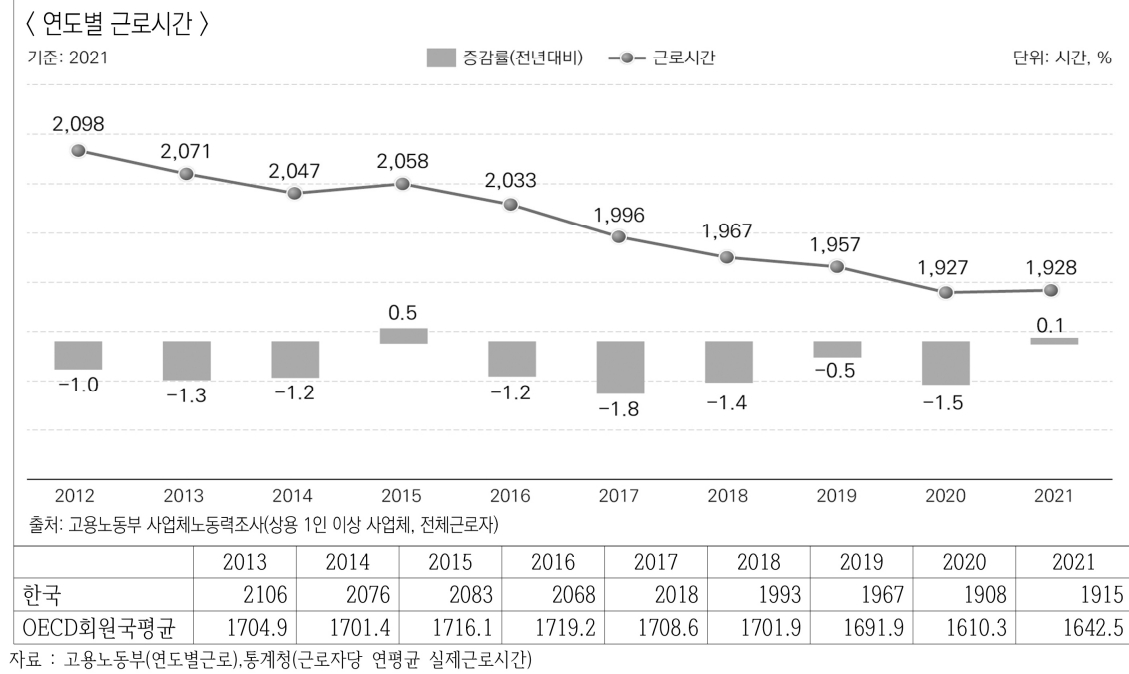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보유자 중심에서 무주택자 중심으로 대전환

-중부세율인하, 특히 2·3 다주택자 중과세폐지 및 세율인하

-시기별 부동산 지원정책으로 어떤 자산보다 안정적이라는 인식으로 과도한 부채동원 및 정부의 빚 내서 집사라는 것으로 국민들 모두 부동산에 집중투자, 시중 유동성의 투기영역 집중으로 효율적 경제(금리,통화)정책 실행 난감,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불리

2. 노동과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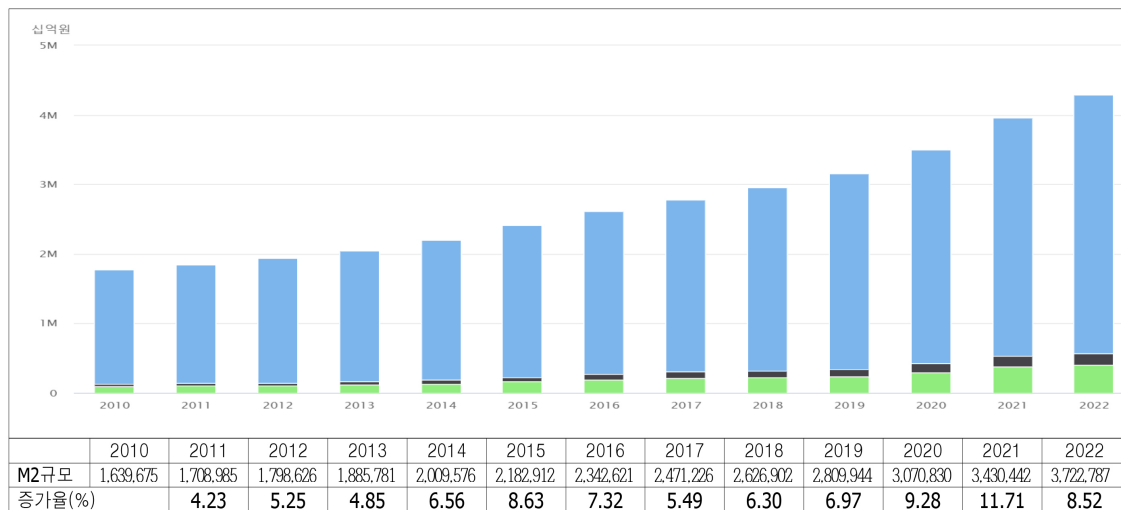
1) 노동·근로시간



Ⅲ. 금융과 가계부채 영역

1.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동성 추세

1) 시장 M2규모 추이(평잔, 계절조정계열)



○M2(=원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MMF, 만기2년 미만정기예금, 수익증권, 시장형상품, 만기2년미만 금융채, 만기2년 미만금전신탁, 기타) 증가는 인플레이션과 원하가치 하락 등의 요인

2)시장 금리추세(%)

i)예금은행대출금리(신규취급)

	2020/Q1	2020/Q2	2020/Q3	2020/Q4	2021/Q1	2021/Q2	2021/Q3	2021/Q4	2022/Q1	2022/Q2	2022/Q3	2022/Q4
대출평균	3.06	2.78	2.66	2.7	2.74	2.74	2.87	3.18	3.49	3.72	4.48	5.49
기업대출	3.15	2.78	2.71	2.71	2.71	2.69	2.78	3.07	3.35	3.63	4.41	5.5
대기업대출	2.93	2.65	2.49	2.5	2.46	2.46	2.55	2.81	3.09	3.37	4.15	5.27
중소기업대출	3.32	2.88	2.84	2.85	2.88	2.83	2.94	3.27	3.56	3.84	4.63	5.73
가계대출	2.91	2.79	2.59	2.72	2.84	2.91	3.09	3.58	3.94	4.14	4.81	5.5
소액대출1)	4.44	4.25	4.03	4.3	4.1	4.39	4.86	5.07	5.06	5.48	6.31	7.43
주택담보대출	2.5	2.53	2.43	2.54	2.67	2.72	2.9	3.47	3.86	3.95	4.43	4.73
예·적금담보대출	2.93	2.66	2.52	2.53	2.4	2.29	2.39	2.5	2.69	2.99	3.46	4.11
보증대출	3.05	2.81	2.53	2.62	2.67	2.68	2.84	3.21	3.52	3.72	4.43	5.62
일반신용대출2)	3.67	3.25	2.89	3.22	3.59	3.7	3.99	4.97	5.36	5.8	6.26	7.68
공공및기타부문대출	2.82	2.41	2.5	2.17	2.31	2.23	2.44	2.66	2.82	3.15	3.88	5.16

1)500만원 이하, 2)2017년9월-2018년2월 일반신용대출과 집단대출 일부항목 분류조정

○가계 소액대출 금리 수준 높아, 긴급 소액대출 필요한 수요자 계층, 대체로 취약계층이라는 점 고려해야 함

ii)비은행금융기관대출금리(신규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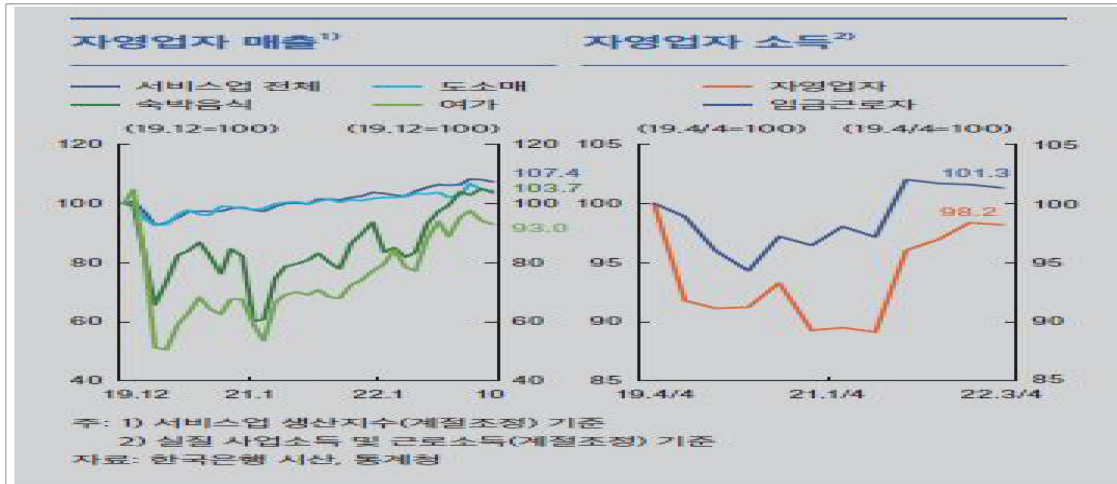
	2020/Q1	2020/Q2	2020/Q3	2020/Q4	2021/Q1	2021/Q2	2021/Q3	2021/Q4	2022/Q1	2022/Q2	2022/Q3	2022/Q4
종금사-할인어음	1.81	1.54	1.29	1.23	1.22	1.25	1.29	1.7	2.05	2.35	3.27	4.57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10.3	9.78	9.96	10.06	9.98	9.96	9.7	9.42	9.19	9.66	10.73	12.11
가계자금대출	14.74	14.24	14.31	14.08	14.23	13.75	13.39	13.61	13.43	13.03	13.32	14.04
주택담보대출	5.57	5.22	5.28	5.1	4.94	5.06	4.93	4.92	4.87	5.06	5.43	6.34
일반신용대출	17.66	17.02	16.88	16.72	16.38	15.46	15.11	15.04	14.62	14.55	14.73	15.91
소액신용대출1)	19.68	19.38	19.04	18.98	18.77	18.08	16.96	16.93	16.36	15.79	15.57	16.89
공공기타대출	6.02	5.5	5.45	5.46	5.34	5.15	5.19	5.09	5.21	5.64	6.34	8.91
신협-일반대출	4.22	4.04	3.92	3.88	3.86	3.88	3.87	4.01	4.38	4.63	5.24	6.41
상호금융												
일반대출	3.69	3.57	3.42	3.35	3.29	3.33	3.35	3.58	3.87	4.12	4.67	5.85
가계자금대출	3.61	3.48	3.28	3.2	3.13	3.18	3.21	3.42	3.74	3.98	4.44	5.4
새마을금고-일반대출	4.22	4.17	4.02	3.92	3.91	3.86	3.86	3.92	4.3	4.6	5.08	6.4
은행신탁대출	3.49	3.12	3.1	2.99	3.05	2.83	2.9	2.87	3.01	3.11	3.55	3.56

1)300만원 이하

○취약차주,소외계층의 대출비중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집중 억제 필요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 거치기간, 상환기간 확대 7%이상 은행 및 비은행 고금리(7%이상) 저금리로 전환 추진, 효과?

2. 자영업자 매출과 소득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12)

-자영업자 매출,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일상회복으로 반등하였으나 2022년 9월 이후 회복세가 주춤, 여가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 미회복

-이에 더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대 등으로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세가 제약 가능성

2-1)자영업자 대출

2021~2022년중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규모¹⁾ 및 증가율²⁾

(단위 : 조원, %)

	자영업자 대출 (A+B)	사업자대출 (A)	가계대출 (B)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2021.1/4	831.8	541.0	290.8	3.5
2/4	858.4	561.3	297.0	3.2
3/4	887.5	583.5	304.0	3.4
4/4	909.2	599.5	309.6	2.4
2022.1/4	960.7	625.1	335.6	5.7
2/4	994.2	648.7	345.4	3.5
3/4	1,014.2	665.1	349.0	2.0
4/4	1,019.8	671.7	348.1	0.6

주: 1) 기말 기준

2) 전분기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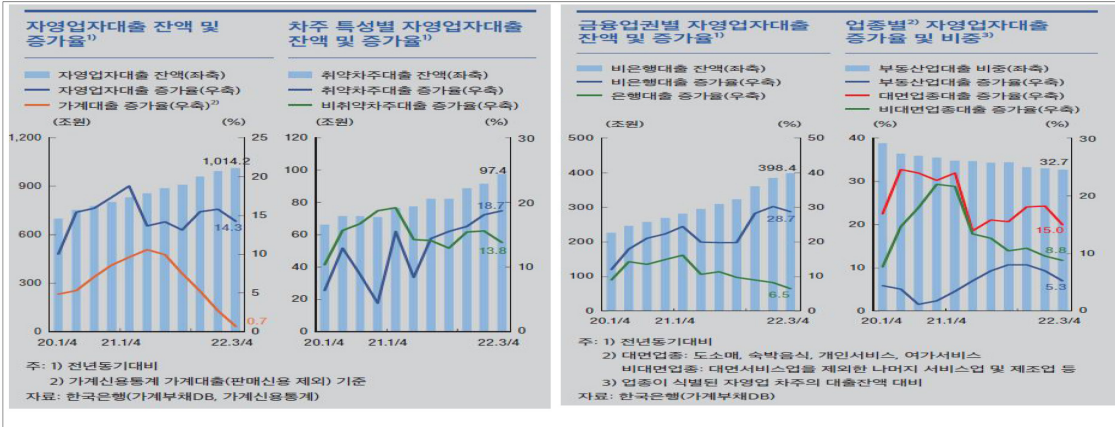
한국은행,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제공

○소상공자영업자 대출규모, 1천조 원 상회, 금리 급등으로 증가율 낮아짐

-금융위,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7.15)”약 12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정책 제시; 손실보전금으로 371만 소상공인 등에게 23조원 지급정책, 성공?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 단기적 효과, 중장기적 효과?

2-2) 자영업자 대출 이슈



자료 : 금융안정보고서, 2022.12

-2022년 3/4분기 말 현재 1,014.2조원(차주 309.6만명, 개인사업자대출 665.1조원, 가계대출 349.0조원)으로 대출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 14.3%의 높은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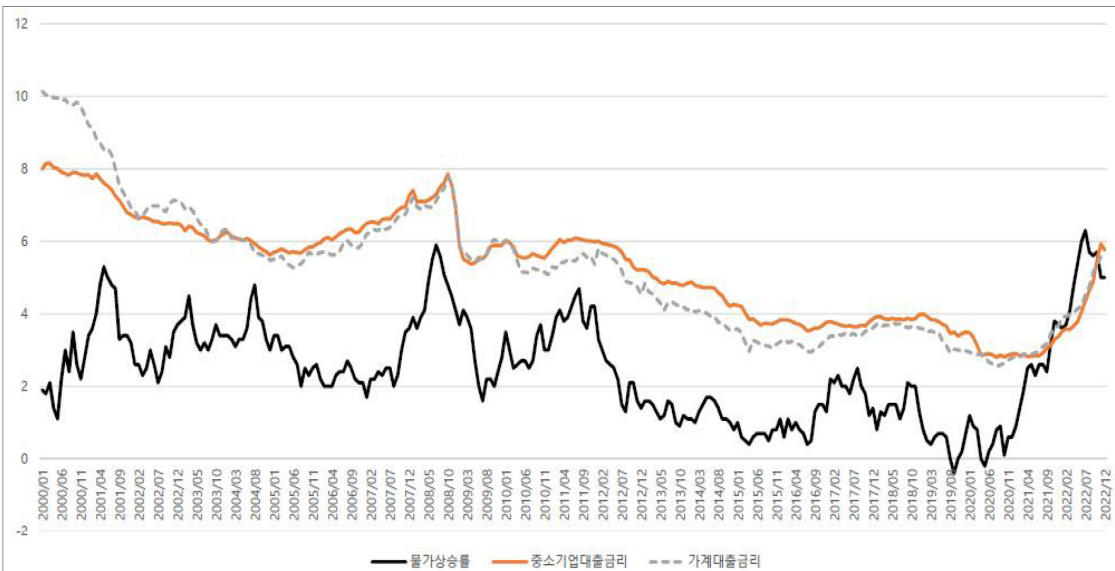
-취약차주(다중채무자+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증가세 급격히 상승. 2022년 3/4분기 중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은 18.7%로 급등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

-대면업종 대출 증가율(2022년 3/4 분기중 15.0%)이 여타 업종에 비해 높고, 부동산업대출 비중(32.7%) 높음

3. 인플레이션과 양극화

3-1) Inflation, 대출금리 추이(예금은행 신규대출기준)



○IMF 금융위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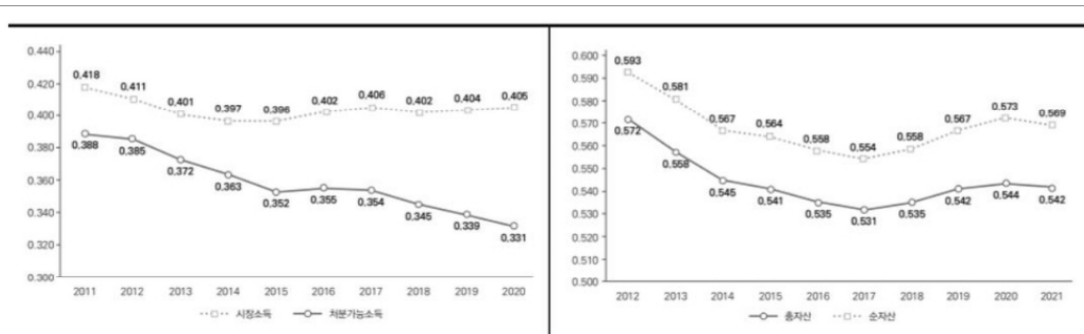
3-2) 실질소득 추이: 증가율(좌), 수준(우)(2000년 기준)



자료 : 통계청

○물가상승은 실질소득 감소 초래,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실물자산 소유자에 유리, 도지, 주택, 실물자산(금...)보유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자산양극화 근본적 구조 악화

3-3) 소득과 자산불평등 추세



주: 1)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2) 소득의 경우 원자료는 통계청(KOSIS), 소득분배지표(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 2022. 6. 13. 인출.)

3) 자산의 경우 2011~2015년(조사 연도 2012~2016년) 조사데이터, 2016~2020년(조사 연도 2017~2021년) 행정보완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자료: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영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그림 4-1-1](p. 196.), [그림 4-1-11](p. 215.) 재인용.

자료: 연합뉴스 2023.2.27.,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2월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양극화는 대체로 완화했으나 부동산값 상승의 영향으로 자산 양극화는 심화
-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총자산·순자산 모두에서 2017년 이후 증가

○가계부채, 차주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별 분포(2022년 3/4분기) ; 고신용 차주 대출 비중 77.6% 고소득 차주 비중 63.4% 수준(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2.12) → 대안?

IV. 글로벌 가계부채 추이와 대응

1. OECD 주요국 ‘가구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적증감 율(%)
미국	129.1	122.2	115.5	117.3	112.5	109.5	109.5	108.6	106.1	104.2	100.1	101.2	-23.78
		-5.34	-5.48	1.56	-4.09	-2.67	0.00	-0.82	-2.30	-1.79	-3.93	1.10	
일본	107.7	108.3	108.3	110.1	111.4	112.1	113.6	115.2	116.6	116.6	115.4	-	6.96
		0.56	0.00	1.66	1.18	0.63	1.34	1.41	1.22	0.00	-1.03		
스페인	145.9	140.2	141.3	133.6	127.6	118.0	113.3	109.3	106.3	101.3	102.7	101.1	-35.72
		-3.91	0.78	-5.45	-4.49	-7.52	-3.98	-3.53	-2.74	-4.70	1.38	-1.56	
프랑스	112.8	113.5	108.3	110.3	111.2	115.5	115.8	119.7	119.6	120.0	123.3	124.3	10.01
		0.62	-4.58	1.85	0.82	3.87	0.26	3.37	-0.08	0.33	2.75	0.81	
핀란드	116.7	120.2	121.7	122.2	122.1	125.4	131.7	137.5	144.2	147.3	154.3	156.0	29.58
		3.00	1.25	0.41	-0.08	2.70	5.02	4.40	4.87	2.15	4.75	1.10	
영국	163.7	162.6	158.5	153.8	153.6	148.3	151.8	152.3	149.5	145.9	151.0	148.4	-9.52
		-0.67	-2.52	-2.97	-0.13	-3.45	2.36	0.33	-1.84	-2.41	3.50	-1.72	
한국	147.5	152.9	153.9	154.9	158.0	162.3	174.5	181.8	185.0	188.2	197.8	206.5	34.38
		3.66	0.65	0.65	2.00	2.72	7.52	4.18	1.76	1.73	5.10	4.40	
호주	191.6	190.6	192.3	192.5	196.3	205.0	211.6	216.9	217.9	211.6	204.3	211.2	10.10
		-0.52	0.89	0.10	1.97	4.43	3.22	2.50	0.46	-2.89	-3.45	3.38	
노르웨이	212.2	216.1	220.1	221.7	225.7	222.1	231.8	236.5	242.4	243.8	247.4	241.0	12.98
		1.84	1.85	0.73	1.80	-1.60	4.37	2.03	2.49	0.58	1.48	-2.59	
네덜란드	282.0	274.9	272.7	267.5	253.6	251.2	246.6	244.8	236.9	228.7	224.9	221.7	-23.70
		-2.52	-0.80	-1.91	-5.20	-0.95	-1.83	-0.73	-3.23	-3.46	-1.66	-1.42	
덴마크	326.2	319.9	314.2	305.8	305.8	293.1	262.5	260.7	253.0	253.2	259.2	254.6	-23.95
		-1.93	-1.78	-2.67	0.00	-4.15	-10.44	-0.69	-2.95	0.08	2.37	-1.77	

자료 : OECD, 「OECD National Accounts」2023.02, 필자 재구성

○주요국가 포함 기준, 선진국과 복지국가로 인식된 국가

-OECD 36개국 중 2021년 한국은 ‘가구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총액 ÷ 가구순가처분소득 × 100) 206.5%로 6번째로 높음

-2021년 기준 OECD 31개 회원국 중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101.1%, 2015년 말 이후 한국가장 높은 18%p 상승

○선진국과 한국 비교

-2010년 기준 한국보다 높은 비율 국가들이 2021년 기준 한국보다 낮아진 정책은 무엇인가?

-부채비율이 낮은 국가들이지만 여전히 크게 늘어나지 않은 국가들의 정책이 무엇인가?

-한국, 거시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전략과 정책은 무엇인가?

2. 저성장 추세 탈출과 전환

○한국경제의 저성장 추세 하락된 다양한 원인 ; 가계부채

-부채레버리지 효과, 과도하면 채무자+금융기관+국가 차원 변동성 큼, 예컨대 경기위축 시 더 심각하게, 회복시 속도 억제, 성장촉진 효과 반감, 성장률 억제(소비위축,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가계부채와 경제성장률 GDP 관계; 가계부채가 경제성장률 영향 주는 GDP대비 임계구간 또는 임계치 70%~80%, (IMF 75%, BIS 80%, IBRD 77%, 롬바르디 80% 등)

-역대 정부,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부실화축소, 서민금융지원 등)에도 가계부채 급증으로 정책실패

-주요선진 국가의 부채비율 급증 및 감소 경험 사례 ; 저금리-주택가격 상승-가계부채 증가(과도한 해외 자본유입에 따른 과잉유동성 등)

○정치권 민생경제 경쟁 중, 민생특위 구성 등 민생주의 경쟁 중이라는 점에서 rhetoric & populism 보다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책 마련 필요

-민생주의 : 민생(民生)과 민생경제; 일반 국민의 생활(+생계), 독점자본 억제 등 다양한 원칙에 따른 평등한 사회 지향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5조 기반으로 관련 하위 법과 제도 재구축

(EX: 21대 국회 반드시 처리해야 할 5가지 입법과제: ①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 & 독점규제법, ②본사의 갑질과 횡포를 막는 가맹사업법 & 대리점법, ③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④한계채무자의 재기와 사회복귀를 위한 파산자 차별금지법(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2023.04)

○정부정책 방향 ; 가계부채 혁신적 축소를 통해 지성장기조 탈출(국가적 과제)

-과도한 가계부채는 중장기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GDP대비 80%이하), 금리정책 한계로 물가상승 통제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자산가들에게 유리, 양극화 심화

-1차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정부부채 비율 보다는 가계부채 해결 및 축소 정책 우선

-특히,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 가계부채 해결, 영세소상공자영업자대상 채무조정 강화로(금융기관+정부재정 적극) 저소득계층과 서민지원 집중을 통해 소득과 자산 양극화 심화 억제

-금융기관 금리 조정 자율성 감독(+횡재세, 요구불·보통예금 이자지급 구조 마련)

-가계부채비율 변화, 분모인 소득보다 분자인 부채가 더 증가한 결과(분모확대 vs. 분자축소 정책, 소득개선 정책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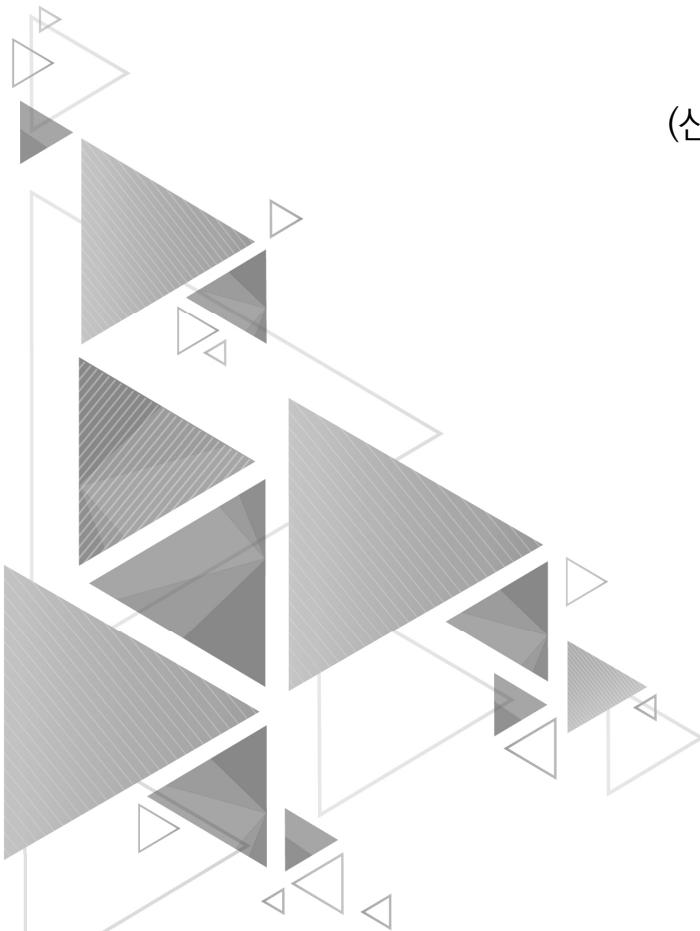
-실질소득 감소 요인 제거(원자재 등 물가상승 완화전략), 디지털혁신 생태계 신산업일자리 제공 정책 강화,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기후위기 관련 글로벌 추세(규율), 적극 대응으로 국내 기업과 산업구조, 경제구조 전환 필요.



토론 1

김한정 국회의원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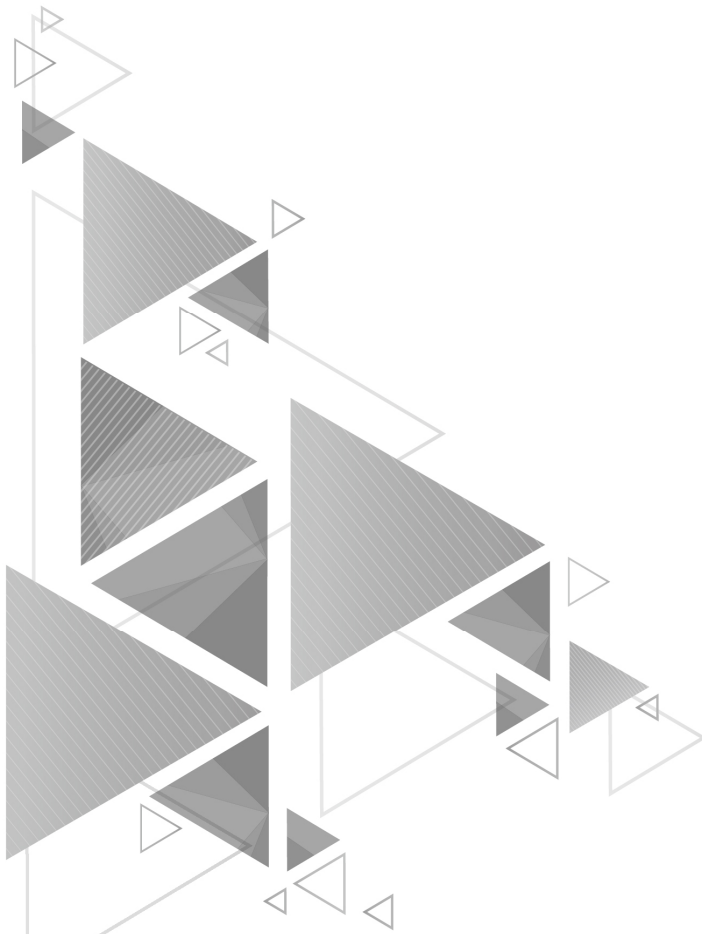


memo



토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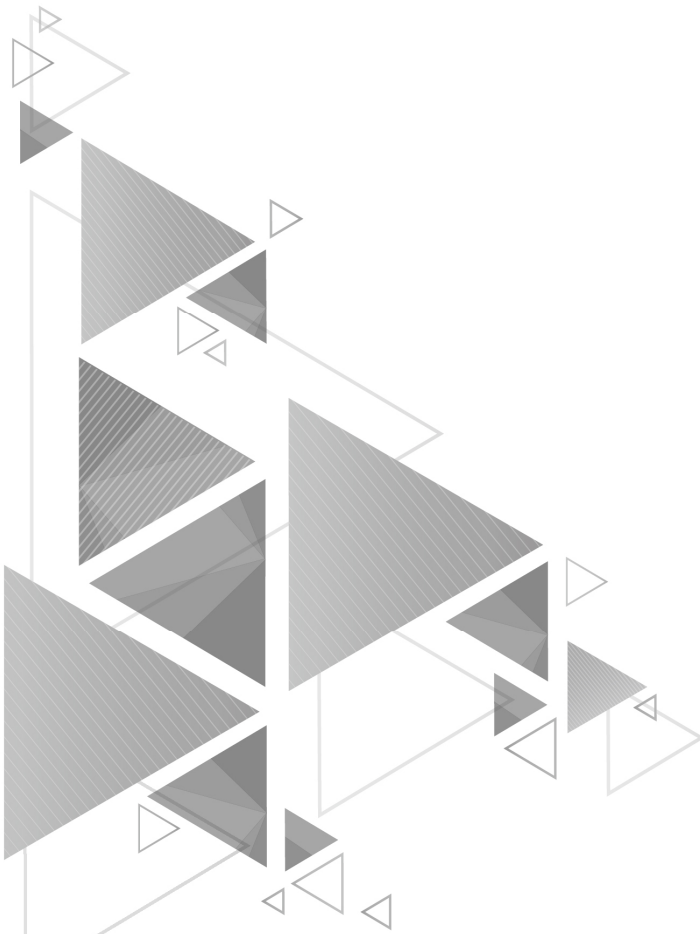
오기형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토론 3

홍성국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memo

memo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깜깜한 미래